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8-1

(공개)

사회이동성 개선방안

- 일자리 · 교육 · 자산형성 중심 -

2024. 5. 1.

관계부처합동

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체계도

사회이동성 저하요인

①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축소

1. 경제역동성·잠재성장률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[세대내·세대간]

- * 경제성장률(% 연평균): ('00년대)4.9 ('10년대)3.3 ('20~'23년)1.9
- * 중소 →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률 연평균 0.3%('17~'21년)

2. 생애주기별 일자리 상향이동 사다리 약화 [세대내·세대간]

- ▶ (청년) 높은 진학률, 군복무 + 기업 채용관행 변화로 취업준비 장기화

- * 청년 구직자 중 정부 청년정책 활용경험자 32.7%에 불과
- * 구직자 76%가 채용공고시 임금조건 미공표 경험

- ▶ (여성) 출산·육아부담으로 M커브 현상 지속

- ▶ (중장년·고령층)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조기퇴직(52.7세) + 저임금·저숙련 재취업하며 일자리·소득 하향이동

- * 근속연수 10~20년 증가시 임금상승률(%)(韓)15.1(OECD)5.9
- * 55~64세 주된 일자리→이직시 임금수준은 100~74.1%로 하향

3.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일자리·소득격차 고착화 [세대내]

- * 사업체규모·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(%): (300인↑&정규)100 (300인↓&비정규)67.2 (300인↓&정규)57.6 (300↓&비정규)44.1
- * 대·중소기업 평균소득 격차(만원): (30대)257 (40대)399 (50대)446

② 교육기회 격차 확대

1. 부모 경제력이 자녀 교육격차에 영향 [세대간]

- * 최고·최저 소득구간 사교육비 격차: '18년 487만원 → '23년 642만원
- * 부모 소득분위별 자녀 학력수준(%), 99년생 기준)

| | 5분위 | 4분위 | 3분위 | 2분위 | 1분위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4년제 ↑ | 69 | 62 | 56 | 47 | 40 |
| 2년제 | 16 | 19 | 22 | 23 | 23 |
| 고졸 | 15 | 19 | 22 | 31 | 37 |

2. 학력격차 → 일자리·소득격차로 재확산 [세대간]

- * 대학서열(5분위-1분위) 임금 프리미엄(%): (30후)46 (40초)51
- *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(%): ('15)46.6 ('20)27.7 ('23)27.3

③ 자산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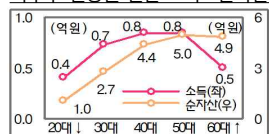
1. 20·30대 저축·투자 통한 자산형성 애로 [세대내]

- *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계자산('23년 역원): (20·30대)3.4 (40세 이상)5.7

2. 중장년·고령층도 현금흐름-자금소요 미스매치로 자산활용도 제약, 계층하향 위험 노출 [세대내]

- * 65세 이상 가구 연평균 의료비 334만원, 소비지출의 15.5%('23년)
- * 가계자산중비금융자산 비중% '21년: (韓)64.4 (英)46.2 (日)37.0 (美)28.5

가구주 연령별 연간 소득·순자산



연금 소득대체율(%)

| | 한국 | OECD |
|------|------|------|
| 저소득층 | 50.9 | 64.5 |
| 전체 | 31.2 | 51.8 |

④ 저소득층 고착화, 사회안전망 부족

- 사회복지제도의 '근로이익 제고' 필요 [세대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참여 조건 등 불이행률/자활성공률(%): ('15) 3.5 / 33.7 → ('23) 13.6 / 24.8
- *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80프로 연동되어 높은수준

사회이동성 개선방안

①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

1. 수요측면 : 규제개혁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 → 역동경제 구현, 잠재성장률 제고 → **양질의 일자리** 확충

2. 공급측면 : 청년·여성 등 **경제활동 참여 촉진**을 위한 맞춤형 지원

| | | |
|----|------------|---|
| 청년 | 고용 인프라 | ① 취준생·니트 위한 「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」 구축 ② 「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」 개편 ·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내일배움카드 심사우대 및 세제지원 · KDT를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→ K-디지털트레이닝+ |
| | 전주기 맞춤형 지원 | ① 신규채용시 근로조건 공개 유도+공공민간 일경험 촉진 ② 軍복무 중 학점 이수 등 역량개발·취업준비 지원 ③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산, 취업준비금 지원 추진 ④ 중소사랑카드 신설 추진 등 근로여건 개선 |
| 여성 | | ① 여성 경력단절 예방 (근로여건 개선 + 일생활균형 지원) ② 경력단절인 재취업 지원(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완화 등) |
| | 중장년·고령층 | ① 중고령층 전직지원 강화 + 계속고용 지원 실효성 강화 ②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 위한 평가인증 체계 마련 |

<구조개혁>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**노동개혁** 가속화

② 능력·노력에 기반한 저소득·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

| | |
|------|--|
| 초·중고 | ① 장학금 초·중·고생까지 확대 , 영재키움프로젝트·드림스타트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② 디지털·IT·예술 분야 확대 등 교육 분야 다양화 |
| 직업계고 | ①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,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산 ② 신산업 중심 학과 재구조화, 취업후 성장사다리 확충 |
| 대학생 | ① 취업연계 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, 주가장학금 신설 ② 대학 편입제도 개선 통한 도전기회 확대 |

<구조개혁> 첨단산업 인재양성, 교육기회 확충 위한 **교육개혁** 병행

③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

| | |
|-----------|---|
| 자산형성 | ① ISA 전면개편 을 통해 근로소득 통한 자산형성 뒷받침 · 공시범위 및 제공상품 확대 등 ISA 경쟁촉진 3중세트 추진 · 세제지원 강화, 통합형 도입 및 손익통산 확대 등 ②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|
| 자산 활용도 제고 | ① 국민연금 급여 감액수령 등 조기수급 개선 검토 ②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|

<구조개혁> 연금개혁 +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

④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자립기반 확충, 저소득층 지원강화 | ① 자활근로후 민간취업시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및 장기근속 촉진 위한 자산형성(희망저축계좌II) 지원강화 ② 기초생보 수급 재산·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|
|--------------------|--|

향후 추진계획 :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 + 사회이동성 개선 동향 주기적 점검·분석 ⇨ 추가대책 지속 마련

사회이동성 개선방안(요약)

I 추진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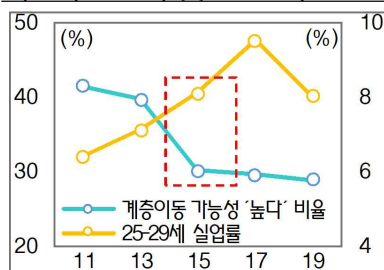
① 사회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

-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, 능력·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
 -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미래투자·근로욕 증대
-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·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모색 →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 구축 가능

② 청년 등 양질의 일자리 기회 부족, 교육 격차 등으로 사회이동성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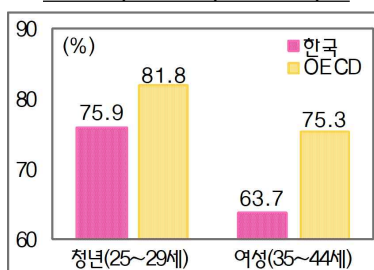
- ① (일자리) '10년대 중반 베이비붐 세대가 잔류한 가운데, 에코세대 본격 진입 → 청년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이동성 인식에 부정적 영향
 - 높은 진학률, 군복무 + 기업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취업준비 장기화 → 20대 고용률·경활률이 OECD 평균대비 낮은 수준
 - * 졸업후 미취업 청년 25.4%는 특별한 활동無 정보부족 등으로 정부지원 미활용 청년 67.3%
- ② (교육) 사교육비 격차 확대 등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어 학력격차·일자리·소득격차로 재확산
- ③ (자산·복지제도) 청년은 낮은 소득·육아비용 등으로 저축·투자 어려움, 중고령층은 소득 감소·자산유동화 제약 등으로 현금흐름 애로
 - *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계자산('18→'23년, 억원): (20·30대)2.8→3.4 (40세 이상)4.5→5.7
 - 사회복지제도의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계층상향이동 지원 강화 필요
 - * 기초생활수급 탈피시 정부지원 축소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'탈수급 함정' → 자활성공률 등 하락
 - 자활성공률(%, (탈수급+취창업자)/자활참여 생계급여 수급자): ('15)33.7 → ('19)29.4 → ('23)24.8

계층이동 인식 및 25-29세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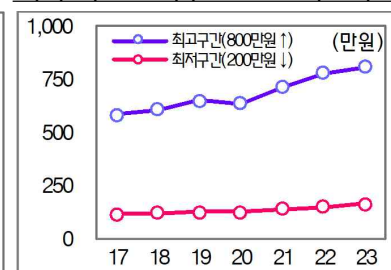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 사회조사, 경제활동인구조사

청년·여성 경제활동참가율



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, OECD

최저·최고 소득구간 연간 사교육비



출처: 초·중고 사교육비 조사(교육부, 통계청)

II 추진방향

◆ 금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

-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,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·추진

목표

경제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

3대 정책방향

1 "양질의 일자리"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

1. 수요 혁신생태계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
- 규제개혁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
2. 공급 청년·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

- ① (청년) 고용 인프라 강화 + 쉼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
- 청년고용케어플랫폼,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(개방형 기업트레이닝, K-디지털트레이닝⁺)
- 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(법개정), 직업계고 거점학교(졸업생 취업지원) 확대, 중소기업사랑카드 신설
- ② (여성) 경력단절 예방(배우자출산후가 확대), 경력단절인재취업 지원(세제지원 확대 등)
- ③ (중장년·고령자) 중장년층 전직지원 강화, 계속고용 촉진, 직무·성과중심 임금 개편 지원

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가속화(경사노위 추진 과제와 병행)

2 능력·노력에 기반한 "교육기회 확대"

- ① (초·중고) 저소득층 지원, 교육분야 확대
(장학금 초·중·고생까지 확대, 조기교육 지원 확대)
- ② (직업계고)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
(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 확대, 신산업중심 학과개편)
- ③ (대학생) 저소득층 지원 강화
(취업연계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, 편입제도 개선)

유보통합·대학개혁 등
교육개혁 병행

3 맞춤형 "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"

- ① 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
(세제지원 강화, 통합형 도입 등 ISA 전면개편)
- ② 연금소득 기반 확충
(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수급 가능토록 개선 등)
- ③ 고정자산 연금화 촉진
(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)

연금개혁안 마련 및
자본시장 선진화 추진

자립 기반 지원 및 약자 복지 강화

(자활성공지원금 신설,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강화 + 생계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)

사회이동성
통계 개발

+

사회이동성 개선동향
주기적 점검·분석

→

추가대책
지속 마련

※ 청년 등 수요자 의견 적극 반영(현장방문 9회, 전문가 간담회 18회 등) + 부처 협업과제 중점 추진

Ⅲ 사회이동성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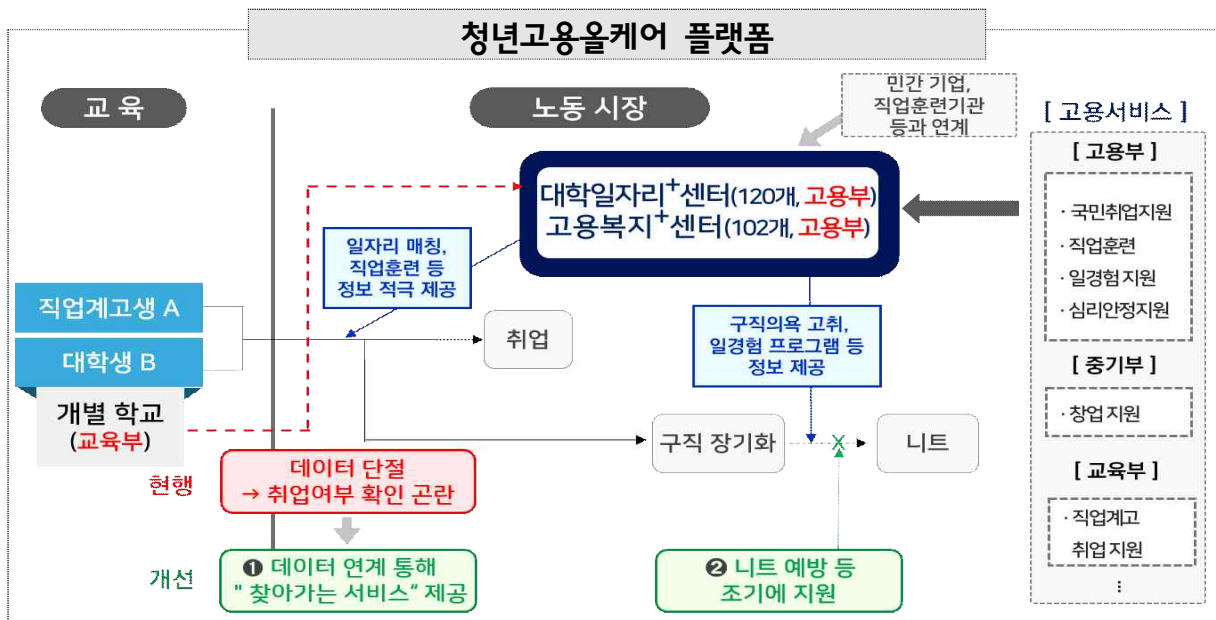
1.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

- ◇ (수요측면) 규제개혁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
→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
*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(5월), 역동경제 로드맵(6월) 마련·발표
- ◇ (공급측면) 청년·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
→ 고용 인프라 확충, 소주기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지원

1 [청년] 고용 인프라 구축

□ 취업준비생·니트를 위한 「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」 구축·운영

- 학생정보(교육부)와 구직·취업정보(고용부)를 연계하여 구직활동·취업여부 등을 확인 → ‘찾아가는 고용서비스’ 적극 제공
* 현재는 기관간 정보 단절로 충분한 고용서비스에 한계(청년정책 미활용 67.3% 영향, '22년)
- 국가장학금(대학)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·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
※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기재부 내 협업조직(교육부·고용부) 설치·운영(고용서비스전략팀 '24.5월)
-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·직업훈련 등을 통해 경제활동참여 촉진, 니트 발굴·예방 → ‘맞춤형 서비스’ 조기 지원
-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온·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(고용24 등과 연계) → 거점형 대학일자리+센터 중심으로 우선 시행('24년)



□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등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

- (개방형 기업트레이닝) 민간기업의 우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방 촉진
 - * 자사근로자용 훈련과정 공개기업 확산 유도(예 : 디자인회사가 개설한 디자인교육플랫폼 OO-X 등)
- 훈련과정 심사 우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(5년간 300~500만원 지원) 지원대상으로 포함
-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- (K-디지털트레이닝⁺) 디지털 분야 중심의 K-디지털트레이닝을 첨단 산업·융합 분야까지 포괄하는 K-디지털트레이닝⁺로 확대·개편
 - 현장 수요에 따라 대상업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, 훈련 대상인원('24년 4.4만명)을 확대하고, 재직자 훈련도 신설
 - 훈련내용·방식 자율성 강화, 훈련비용 실비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적인 훈련과정 개발·제공을 촉진
 - * 성과 우수기관 훈련설계 재량 허용, 고성과 훈련과정은 NCS표준단가 무관하게 실비 지원

2

[청년] 순주기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

□ (재학 중)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, 대학일자리센터 전면 개방, 군복무 중 학업 지원

- (직업계고) 직업계고 거점학교(현재 17개) 확대 등을 통해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, 취업·진로상담 지원 강화
 -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 지원 추진
- (대학교) 대학일자리⁺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간 연계를 강화*하고, 인프라 확충
 - * 현직자 멘토링 개방, 취업스터디 및 센터간 취업박람회 등 연합 프로그램 확대
- (군복무 중)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강좌(年 12학점), 복무경력(현재 학교당 1~4학점)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·대학 확대 추진
 -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·매칭지원을 대폭 확대(각각 최대 '24년 40→'25년 55만원)하고, 취업맞춤특기병 지원강화

□ (구직자 등) 근로조건 공개 촉진, 일경험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

- (일자리 탐색)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*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 촉진
 - * '24년 공정채용 컨설팅 메뉴얼 및 경진대회 평가요소에 관련내용 반영
- 우수기업·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,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·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*
 - * (예) 청년일자리강소기업 : 청년친화강소기업(고용부)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(중기부) 통합 등
- (일경험 확대) 민간 일경험('24년 4.8만명)·공공기관 청년인턴*(2.2만명) 지원을 확대하고, 지자체·민간사업까지 포함한 일경험플랫폼 구축
 - * 채용형 인턴 규모('24년 0.3만명) 확대 및 우수인턴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 부여 등
- (쉬었음 예방) 구직단념예방을 위한 '청년성장프로젝트'를 확대하고, '6개월 이상 쉬었음' 청년의 구직의욕 제고를 위한 '청년도전지원사업' 확대*
 - * 1:1면담·참여수당 등 지원 → 현장수요 등 고려 연초 계획대비 약 600명 확대(9,000→9,639명)
- (주거·복지)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디딤돌 대출시 우대금리(0.2%p)를 도입하고, 유휴 국유재산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 지원
 -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'중기사랑카드' 신설

3

[경력단절예방·재취업] 안정적 근로소득 유지토록 생애주기 지원

- (경력단절 예방) 육아휴직 급여(현재 통상임금 80%, 월 상한 150만원)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 개편*
 - * 대체인력 지원금 복원 →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 선택권 부여
-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(10→20근무일)으로 대폭 확대하고,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·육아휴직* 사용을 허용
 - * (예)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,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
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(現 중위소득 150% 이하)을 완화하고, 본인부담비율(現 15~85%)도 하향 조정
- (경력단절 재취업)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*을 폐지하고, 경력단절남성까지 포함
 - * 현재 "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(중분류)의 기업"에 재취업시에만 지원
 - ↳ (예)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 →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시 지원 불가

- 새일여성인턴을 1년 이상 정규채용할 경우 **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**을 추가 지원하고, 새일센터 **훈련참여시 참여촉진수당(월 10만원)** 신설

* (현재) 정규채용 후 6개월 유지시 기업80·개인60만원→(개선) 1년 유지시 기업80만원 추가

- (**중장년 전직 등**)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, **직무·성과 임금체계** 전환을 위한 **평가인증 체계***를 마련하고 세제지원 강화

* (판단기준) ①직무평가, ②직무가치 반영 임금체계 도입(노사합의 및 규정반영), ③적용비율 등

※ 경사노위 논의를 토대로 '중장년 전직지원 및 재취업 방안('24.下)' 및 고령자 '계속고용 로드맵('24.下)' 마련 추진

◇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,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, 이중구조 개선 등 **노동개혁** 가속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

2.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

□ (**초중고**)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강화, **직업계고** 교육경쟁력 강화

- (**저소득층 조기지원**) 꿈사다리 장학금(현재 중1~고3 지원중) 지원대상을 **초등학생까지 확대**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**조기에 발굴·지원**

* 초등 5~6학년 대상으로 지원 →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 검토

- **영재키움 프로젝트**(1:1 멘토링) **초3 과정 신설***과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**드림스타트**** 대상 확대를 통해 초기단계 학업격차 완화

* (현재) 초등학교 4학년~고등학교 3학년 대상 → (개선)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신설('25~)

** 현재 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계층), 한부모가정 → 대상확대 검토

- (**직업계고**) 고졸 전형 등을 통해 **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***하고, 일경험·취업·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**직업교육 혁신지구**** 확대

*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기준(8%) 상향 검토 및 고졸인재 채용 우수사례 확산

**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산·학·관 연계하여 일경험 취업 후학습 등 지원('24년 13곳·'25년 추가 지정)

- 「**기술사관*** - 중소기업 계약학과** - 중소기업 인재대학」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재학·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 지원

* 특성화고-전문대-기업 협업 4년제 교육과정 → 중소기업 취업 연계 → 산업기능요원 우대

** 대학-중소기업-학생(근로자) 협약 통해 맞춤형 교육(직업계고 졸업생 선발 우대 중)

□ (대학생) 장학금 지원확대 및 편입제도 개선 등 도전기회 확충

- (장학금)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(100→150만명), 근로장학금(14→20만명) 지원인원을 확대하고, **주거장학금** 신설(최대 年 240만원)
※ 민생토론회(24.3월) : "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장학금 대폭 확대"
- 중소·중견기업 취업연계 **희망사다리 I 유형**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 우선 선발제도 도입
- (편입제도) 4대 요건(교지·교원·교사·수익용 기본재산) 중심 대학 **편입제도 개선*** → 대학규제 합리화 및 도전기회 확대
* 현재 요건 확보율 70%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충원 가능(이월인원 제외)

◇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, RISE·글로벌대학 등 대학개혁, 유보통합·늘봄학교 등 **교육개혁** 병행

3.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

- (ISA 전면개편)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**ISA 제도 전면개편** 추진
 -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「**ISA 경쟁촉진 3중세트**」 추진*
 - ① ISA 공시범위,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(수수료 한정 → 상품리스트 등)
 - ②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(은행의 신탁형 ISA내 제공상품 확대 등)
 - ③ ISA 이전방식 편의성 제고 → 이전현황, 소요시간, 이전방식 등 점검
 - 유형별(중개·신탁·일임형)로 구분된 **ISA 통합** 등 종합적 개선방안 검토
 -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**손익통산** 확대 적용 추진
 - **납입**(2배)·**비과세한도**(2.5배)를 확대하고, 국내투자형 ISA 연내 신설
- (국민연금 활용도 제고) 가입-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**급여의 일부도 조기수급**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검토
* 현재는 '급여 전액'에 대해서만 조기수령 가능(최대 5년 가능, 1년당 6%씩 감액)
- (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)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 등)을 **양도**하고 **연금계좌 납입시 세제지원**

| 주택다운사이징 세제 |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도입 |
|---|---|
| ▶ 12억이하 '주택'에 한해 60세이상 1주택자의 주택양도차익 1억원까지 연금계좌 일시납입 허용 * 이자·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 | ▶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(10년 이상)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 등) 양도차익 연금계좌 납입 허용 * 이자·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 ▶ 연금계좌 납입액(한도 1억원)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마련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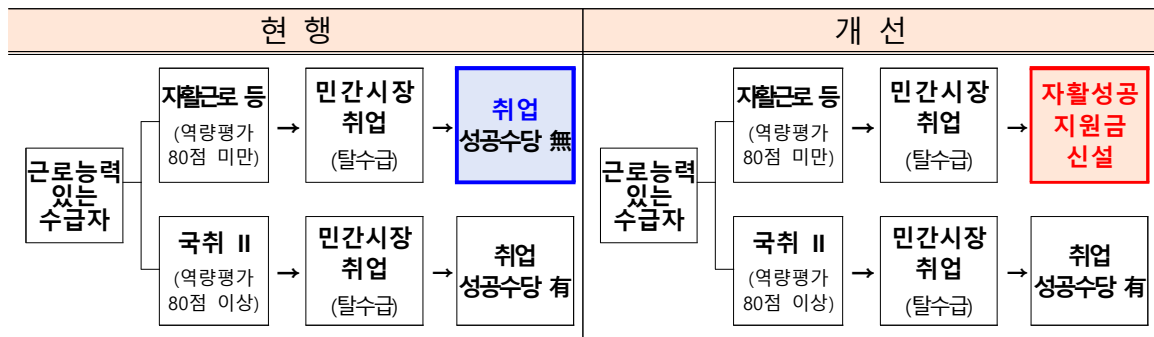
- 주택·농지연금 및 부동산 신탁·리츠 활성화,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통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 추진('24.上)

◇ 연금개혁,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일자리, 근로소득에 기반한 자산형성 유인 강화

4.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

- (자립기반 강화)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 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*을 신설·지급

* (예) 탈수급후 취업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(6개월후 50만원, 추가 6개월후 100만원)



-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II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 인상*(매년 10만원 → 1년차 10만원, 2년차 20만원, 3년차 30만원)

* 근로활동 중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

- 참여자의 실질적 근로의욕·역량이 반영되도록 자활역량평가를 개편('24.下)하고,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 확충

- (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) 자동차(배기량·차량가액) 소득환산율*, 부양의무자 연소득·일반재산** 등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

* (현재) 배기량 1,600cc 미만으로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

** (현재)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생계급여 수급 제외

◇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구조개혁 수반 필요

- 우선 금년도 예산편성 및 세제개편부터 사회이동성 개선을 중요요소로 고려

⇒ 금년 중 천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동향·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

* '24년 하반기 「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 마련 추진

순 서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추진배경 | 1 |
| II. 사회이동성 저하 요인 | 3 |
| III. 추진방향 | 8 |
| IV.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| 9 |
| 1.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| 9 |
| 2. 능력·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| 31 |
| 3.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| 37 |
| 4.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| 43 |
| V. 향후 추진계획 | 4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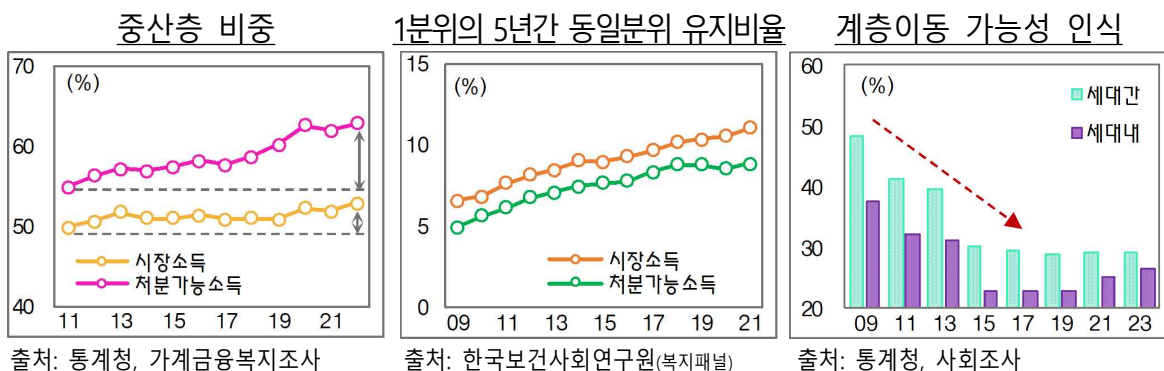
I. 추진배경

① 사회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

- 미래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, 능력과 노력에 따라 소득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
 - 사회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래투자·근로욕 저해 → 잠재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생산성 향상 지체(OECD, '18년)
 - 원활한 사회이동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혁신유인 제고 필요
-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·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 모색 →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기반 구축 가능

②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서는 '이동성 ↔ 성장' 선순환 중요

- 복지 확대로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(중위소득 50~150%)의 비중 증가
- 다만,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 비중 정체 + 저소득층 소득이동 상향기회가 둔화되고 세대내·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 인식도 약화
- “경제성장·시장기능을 통한 계층상향 기회 확대 →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참여 + 미래투자 촉진 → 경제 성장”의 선순환 구조 필요



◇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 구현

⇒ 6월중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예정, 그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

[BOX] 사회이동성 개념과 소득분배와의 관계

□ 사회이동성은 세대내·세대간 사회경제적 계층(소득·직업·교육)의 이동가능성

- (세대내) 개인이 생애주기 동안 경험하는 사회적·경제적 지위 변화
(세대간) 부모세대와 비교했을 때 자녀세대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변화



※ “경제성장·시장기능 통한 계층상향 기회 확대 → 경제주체의 미래투자 촉진 → 경제 성장”의 선순환 구조 필요

- 사회이동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 존재.

WEF 사회이동성 지수*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82개국 중 25위(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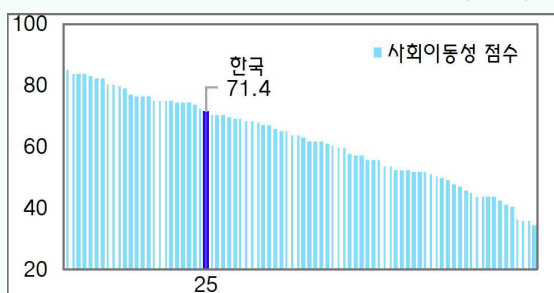
* 건강, 교육, 기술, 일자리, 회복력·제도에 대한 10개의 핵심지표로 측정

□ 소득분배가 생산·경제활동에 따른 ‘결과의 평등’이라면, 사회이동성은 경제적·사회적 성공을 위한 공정한 ‘기회의 평등’

* “어느 시점에서든,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이동성의 결과이자 원동력”(OECD, 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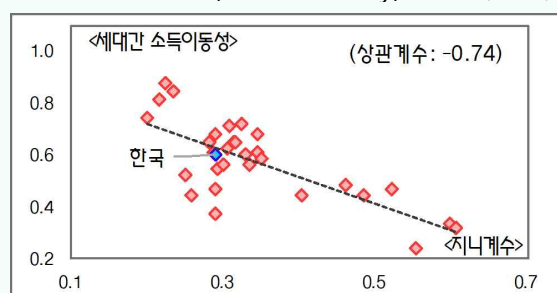
- 사회이동성과 소득분배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이론 부재하나, 이동성이 높은 국가는 소득분배도 양호한 경향(OECD, '18년)

WEF 사회이동성 지수 순위·점수('20년)



출처: WEF, Global Social Mobility Index

위대한 개츠비(Great Gatsby) 곡선*('18년)



출처: OECD, 소득 불평등·소득 이동성 사이의 (-)관계

II. 사회이동성 저하 요인

1.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 상향기회 축소

① 경제역동성 · 잠재성장을 저하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

- 성장률 추세적 저하, 중소기업 →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약화

* 경제성장률(% , 연평균): ('90년대)7.3 ('00년대)4.9 ('10년대)3.3 ('20~'23년)1.9

* 중소 →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률은 '17~'21년 평균 0.3%(중소 · 중견기업기본통계)

② 생애주기별 일자리 상향이동 사다리 약화

- (청년) 높은 진학률, 군복무 + 기업 채용관행 변화 등으로 취업준비 장기화 → 20대 고용률 · 경활률이 OECD 평균대비 낮은 수준

- 정보 부족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정책 미활용 청년 상당수*, 졸업후 미취업 청년 中 25.4%가 특별한 활동 없이 경제활동 미참여

* 청년 구직자 중 정부 청년정책 활용경험자는 32.7%에 불과, 미활용 사유로 40.6%가 '정보탐색 어려움', 38.1%가 '몰라서'라고 답변(중기중앙회, 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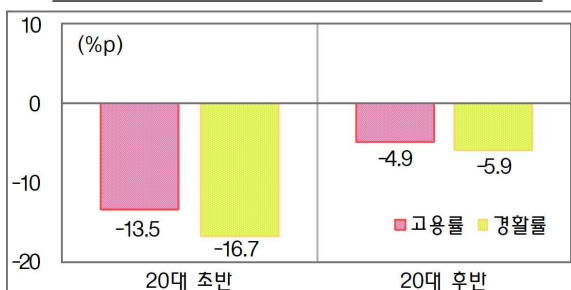
- 경력직 · 수시채용 확대로 기업은 채용시 직무역량 · 일경험 중시, 청년은 양질의 직업훈련 · 직무경험 기회 부족

* 기업 신규채용 결정요소(고용부, '23년): (직무관련 일경험)35.6% (일반직무역량)27.3%
청년 구직활동시 애로사항(중기중앙회, '22년): (직무경험·경력개발 기회부족)68.9%

- 구직자 76%가 채용공고에서 임금조건 미공표 경험(권익위, '18년) 등 기업-구직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채용결정 후 퇴직사례도 빈번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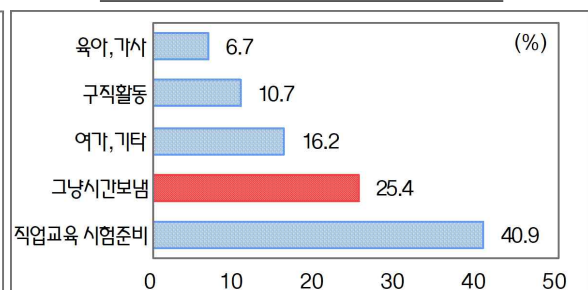
* 졸업후 첫일자리 근속기간 평균 1년 7개월 그만둔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 45.9%(통계청 '23년)

OECD 대비 20대 고용률·경활률 격차



출처: OECD,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('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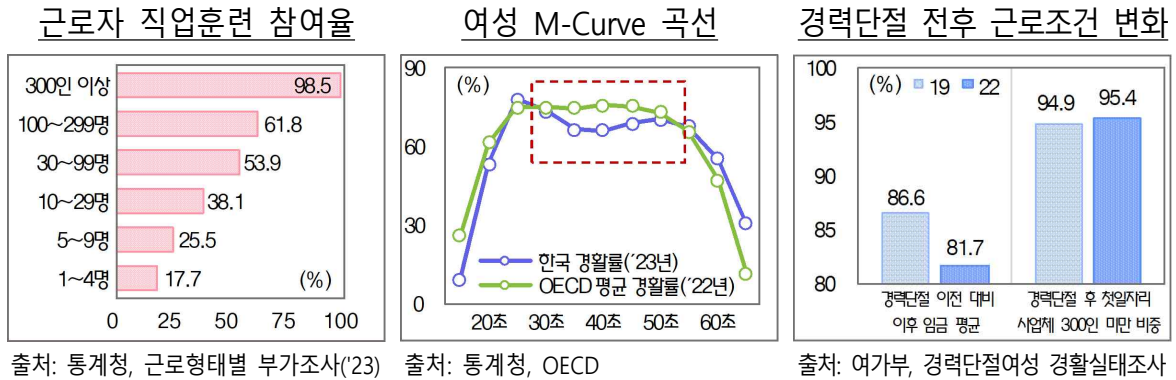
졸업후 미취업 청년 주된 활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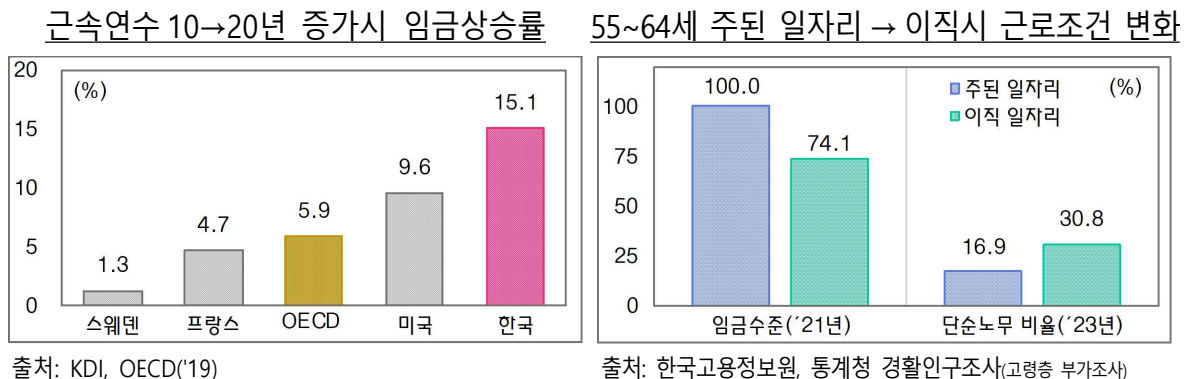
출처: 통계청,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('23)

○ (중년)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재교육·훈련기회 부족 등으로
중소기업 → 대기업 이동 등 일자리 상향이동 기회 제약

- 특히, 여성은 출산·육아 부담으로 30·40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
M-Curve 현상 지속, 경력단절 후 재취업시 일자리 질도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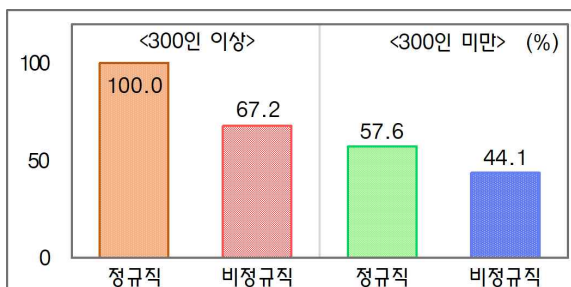


○ (장년·고령층)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조기퇴직(평균 52.7세)
→ 저임금·저숙련 일자리로 재취업하며 일자리·소득 하향이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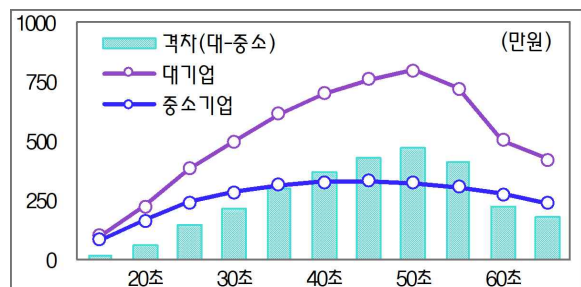


3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청년기에 형성된 일자리·소득격차 고착화

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수준



대·중소기업 평균소득 격차



2. 교육기회 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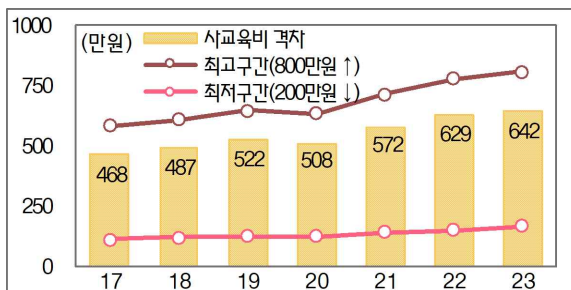
① 부모 경제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

-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지속 확대, 학업 성적이 가정형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도 높은 수준*

*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편이라는 인식 75.2%, 과거에 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는 인식 71.8%(한국교육개발원, '20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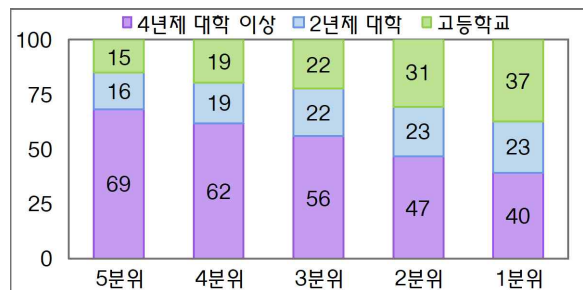
- 부모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4년제 대학 졸업 비중 등 자녀의 최종학력 수준도 낮아지는 경향

최고-최저 소득구간 연간 사교육비 격차



출처: 통계청,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

부모 소득분위별 자녀 학력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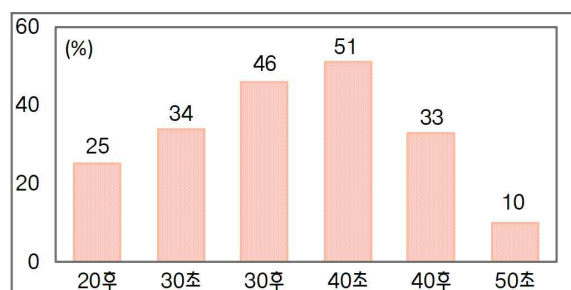


출처: 한국직업능력연구원('23, '99년생 대상)

② 부모 경제력 격차 → 학력격차 → 일자리 · 소득격차로 재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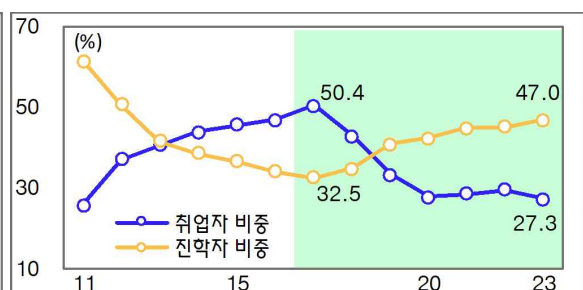
- 학력격차는 생애주기별 임금 수준 및 정규직 · 대기업 취업여부, 장기근속 등에 상당한 영향(KDI, '24년)
- 대학 외 직업계고 등 경로를 통한 상향 이동 가능성도 높지 않음

대학입학성적 분위별(5분위/1분위) 임금 프리미엄



출처: KDI('23), 대학졸업자들의 임금자료 활용(노동패널)

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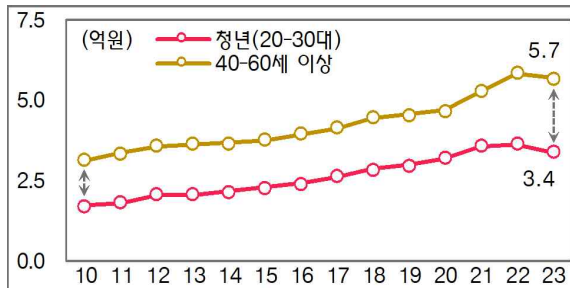
출처: 한국교육개발원,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,

3. 자산형성 · 활용 등 통한 계층이동 기회 부족

① 청년층과 중장년 · 고령층 간 자산격차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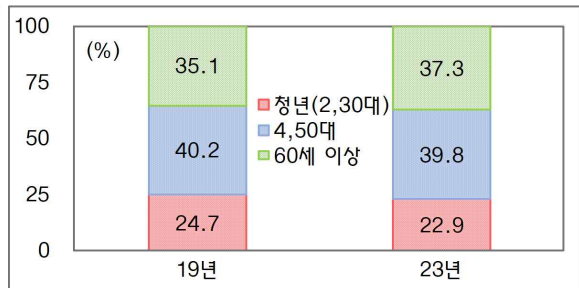
- 20·30대는 낮은 소득, 결혼·육아비용 부담 등으로 근로소득의 저축·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에 어려움

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가계자산



출처: 통계청, 가계금융복지조사

전체 가계자산 중 연령대별 자산 비중



출처: 통계청, 가계금융복지조사

② 중고령층도 현금흐름-자금소요 미스매치로 계층하향 위험 노출

- 중고령층은 조기퇴직과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한편, 건강유지·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

* 연금 소득대체율(%): (韓) 저소득층 50.9 / 전체 31.2 (OECD) 저소득층 64.5 / 전체 51.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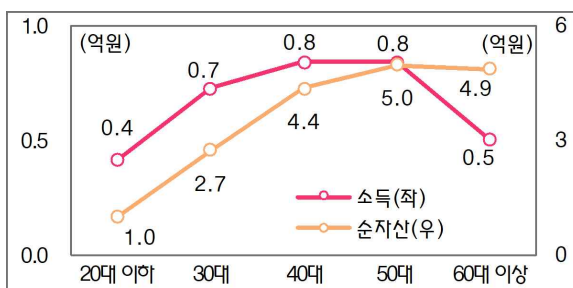
* 65세 이상 가구 연평균 의료비 약 334만원, 연평균 소비지출의 15.5%(‘23년)

- 가계자산 중 고정자산 비중이 2/3에 달하는 가운데, 실물자산 유동화 제약 등으로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

* 전체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(%, ‘21년): (韓) 64.4 (英) 46.2 (日) 37.0 (美) 28.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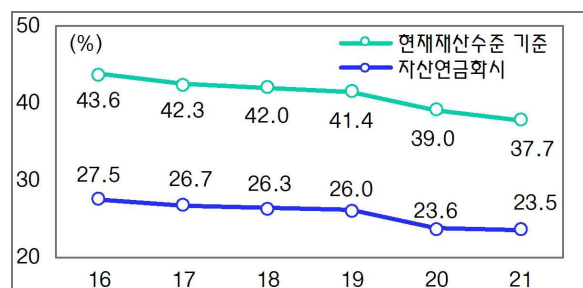
↳ 고령층 자산 연금화시 韓 노인빈곤율은 14.2%p 수준 하향 추정(KDI, ‘23년)

가구주 연령별 연간 소득 및 순자산



출처: 통계청, 가계금융복지조사(‘23)

가계보유자산 연금화시 노인빈곤율



출처: KDI(‘23)

4. 저소득층 고착화, 사회안전망 부족

① 사회복지제도의 '근로이익 제고 → 계층상향이동 지원'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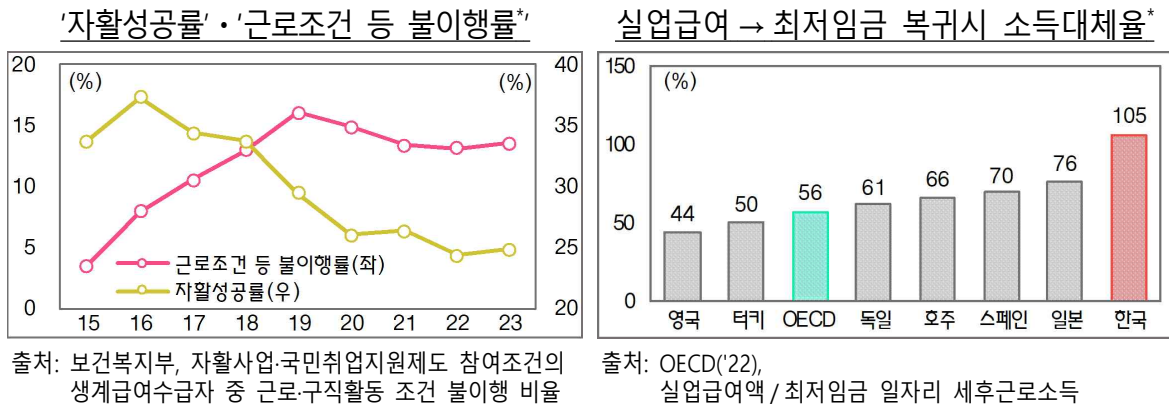
- 기초생활수급 탈피시 정부지원 축소로 가용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'탈수급 함정' 등으로 적극적인 자립의지 제약*

*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없는 비율 76.0%(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, '23년)

- 근로장려금(EITC) 및 실업급여의 지원수준은 높아진 반면, 근로이익 및 구직활동 증대 유인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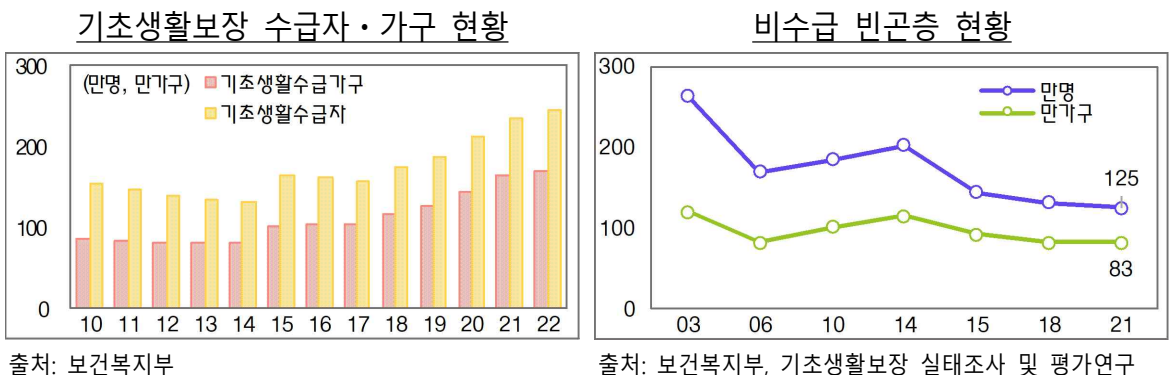
* 충분한 근로유인 제공 관점에서 현재 EITC 설계 방식은 향후 점진적 개선 필요(조세연 '23년)

*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프로에 연동되어 높은 수준 → 근로유인 低(OECD, '22년)



②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속 강화하였으나 복지 사각지대 존재

- 공적이전소득 보장 강화로 기초생활수급자(245만명, 170만 가구) 확대
- 다만, 엄격한 재산 ·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여전히 125만명 (83만 가구)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 존재



Ⅲ. 추진방향

◆ 금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

- 추가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,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·추진

목표

**경제성장과 사회 이동성이 선순환하는
역동경제 구현**

3
대
정
책
방
향

① "양질의 일자리" 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

1. 수요 혁신생태계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
- 규제개혁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
2. 공급 청년·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

① (청년) 고용 인프라 강화 + 쉼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

-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,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(개방형 기업트레이닝, K-디지털트레이닝⁺)
- 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(법개정), 직업계고 거점학교(졸업생 취업지원) 확대, 중소기업카드 신설

② (여성) 경력단절 예방(배우자 출산휴가 확대), 경력단절인재취업 지원(세제지원 확대 등)

③ (중장년·고령자) 중장년층 전직지원 강화, 계속고용 촉진, 직무·성과중심 임금 개편 지원

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**노동개혁 가속화**(경사노위 추진 과제와 병행)

② 능력·노력에 기반한 "교육기회 확대"

- ① (초·중고) 저소득층 지원, 교육분야 확대
(장학금 초·중·고·대생까지 확대, 조기교육 지원 확대)
- ② (직업계고)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
(공공기관 고졸채용 비중 확대, 신산업중심 학과개편)
- ③ (대학생) 저소득층 지원 강화
(취업연계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, 편입제도 개선)

유보통합·대학개혁 등
교육개혁 병행

③ 맞춤형 "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"

- ① ISA를 활용한 자산 형성 지원
(세제지원 강화, 통합형 도입 등 ISA 전면 개편)
- ② 연금소득 기반 확충
(국민연금 급여 일부 조기수급 가능토록 개선 등)
- ③ 고정자산 연금화 촉진
(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등)

연금개혁안 마련 및
자본시장 선진화 추진

자립 기반 지원 및 약자 복지 강화

(자활성공지원금 신설, 희망저축계좌 II 지원 강화 + 생계급여 재산기준 완화 등)

사회이동성
통계 개발

+

사회이동성 개선동향
주기적 점검·분석

→

추가대책
지속 마련

※ 청년 등 수요자 의견 적극 반영(현장방문 9회, 전문가 간담회 18회 등) + 부처 협업과제 중점 추진

IV. 사회이동성 개선방안

1.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

- ◇ **수요측면**에서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(역동경제 로드맵 마련, '24.上)
- ◇ **공급측면**에서 청년·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→ 일자리 상향 사다리 강화
 - ① **(청년고용인프라)**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
 - 「**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**」을 구축하여 졸업 직후부터 구직·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, 니트 예방·탈출 지원
 - 「**개방형 기업트레이닝**」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업준생에 개방하고, K-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(**K-디지털트레이닝+**)
 - ② **(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)** 직업계고부터 대학생 - 군인 - 구직자 - 재직시까지 일자리를 통한 생애주기 소득 상향이동 사다리 구축
 - **직업계고 거점학교** 확대 등 취업지원 강화, 대학일자리+센터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토록 센터간 연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
 - 군복무 기간 중에도 **학점이수·특기병** 등 자기개발 여건 조성 + **장병내일준비적금** 최대 납입한도·정부매칭지원 확대
 - 구직자의 원활한 일자리 탐색 지원을 위해 신규 일자리 **채용공고시 임금수준 등 공개** 유도, 민간·공공 일경험 확대
 - **중기사랑카드** 신설, **디딤돌 대출** 우대 등 복지·주거 지원 확대 통해 조기입직·장기근속 유도
 - ③ **(여성·육아)** **배우자 출산휴가**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통한 경력 단절 예방 + **경력단절인 재취업 통합고용세액공제** 지원 확대
 - ④ **(중장년·고령층)**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 등 **중장년 전직지원** 강화,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의로의 전환 인센티브 강화
- ◇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,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, 이중구조 개선 등 **노동개혁** 가속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뒷받침

1 수요측면: 혁신생태계 강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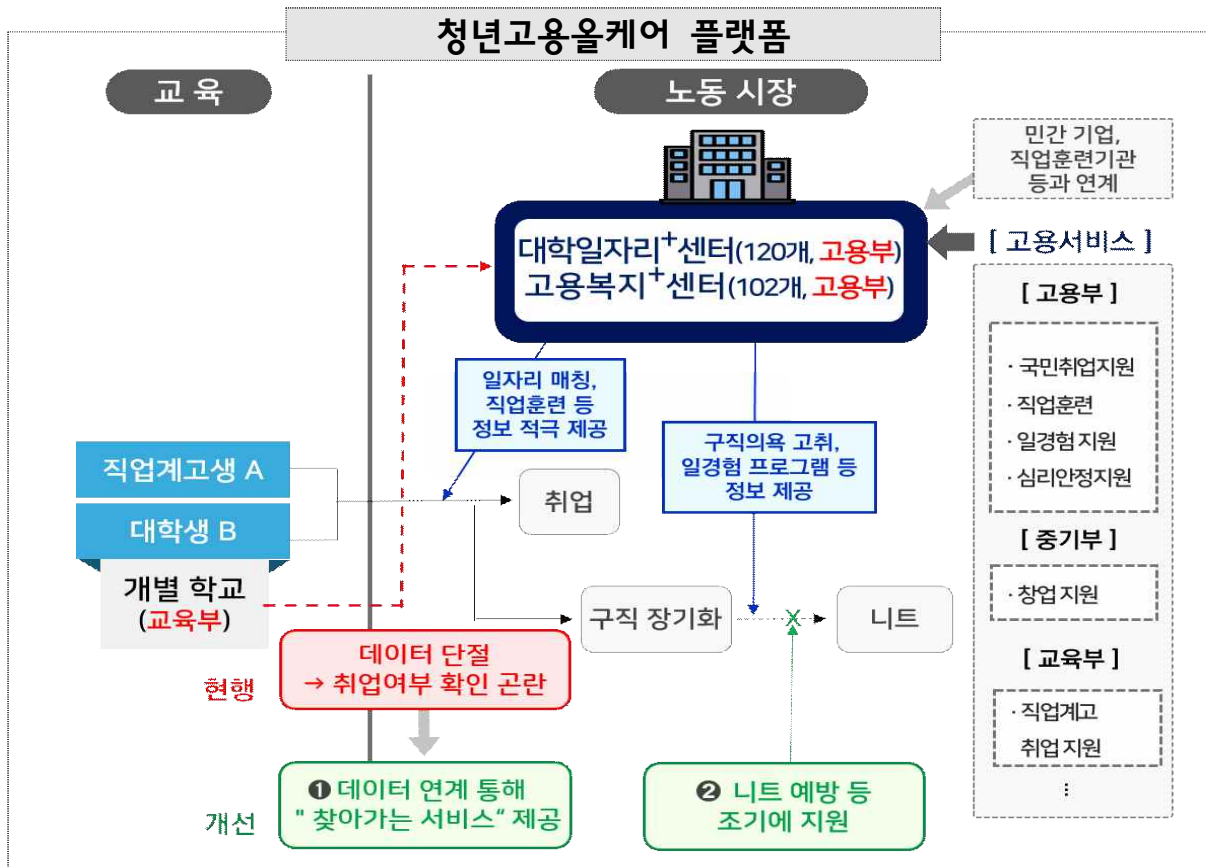
- 규제개혁·첨단산업 육성, 중소기업 스케일업 등을 통한 성장률 제고
→ 미래세대의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
-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축인 혁신생태계 강화, 공정기회보장 방안 등을 포함하는 「역동경제 로드맵」 마련('24.6월)
- ※ 우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·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마련('24.5월)

2 공급측면: 청년·여성 등 경제활동참여 확대 위한 맞춤형 지원

(1) [청년] 고용 인프라 구축

① [인프라] 취준생·니트를 위한 「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」 구축

- (찾아가는 고용서비스)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여 노동시장 진입단계 미취업 졸업생에게 고용서비스 적극 제공
- ① 학생정보(교육부)와 구직·취업정보(고용부)를 연계*하여 구직활동·취업여부 등 확인
 - * 학생정보와 구직·취업정보 간 연계 미흡으로 충분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
→ 청년들의 청년정책 미활용(67.3%, '22년)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 - 국가장학금(대학)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·컨설팅·직업훈련 등 적극 지원
- ② 경제활동참여 촉진, 니트* 발굴·예방 등을 위해 졸업 직후부터 일자리 매칭,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맞춤형 서비스 조기 지원
 - * 청년 중 '취업상태 또는 학업 중이거나 훈련에 종사' 하지 않는 사람
 - 구직 장기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의욕 고취, 일경험·경력설계 지원 등 집중관리를 통해 니트 예방·탈출 지원
- (통합서비스) 고용24(온라인센터)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여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온·오프라인 통합고용서비스 고도화
- * (고용부) 국민취업지원 직업훈련 등 (중기부) 창업지원 등 (교육부) 직업계고 취업지원 등



○ **(추진체계)**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위해 기재부 내 고용부·교육부 등과 **협업조직 설치**(고용서비스전략팀, '24.5월)

※ 이와 별도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고용부, 교육부, 기재부 등 실무협의체 운영('24.4월~)

- **[1단계]**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+센터 중심으로 실시
(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개선 병행)
- **[2단계]** 일반형 대학일자리+센터 및 고용복지+센터로 도입 확대
- **[3단계]** 고용24(온라인고용센터)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하여 온-오프라인·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

※ 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병행 추진

【 현장목소리 】 직업계고 취업지원 간담회('24.3.26일)

- ▶ "중앙, 시·도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직업계고 졸업인재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, 졸업 후에는 학생들이 학교로 잘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후속관리가 어려워요.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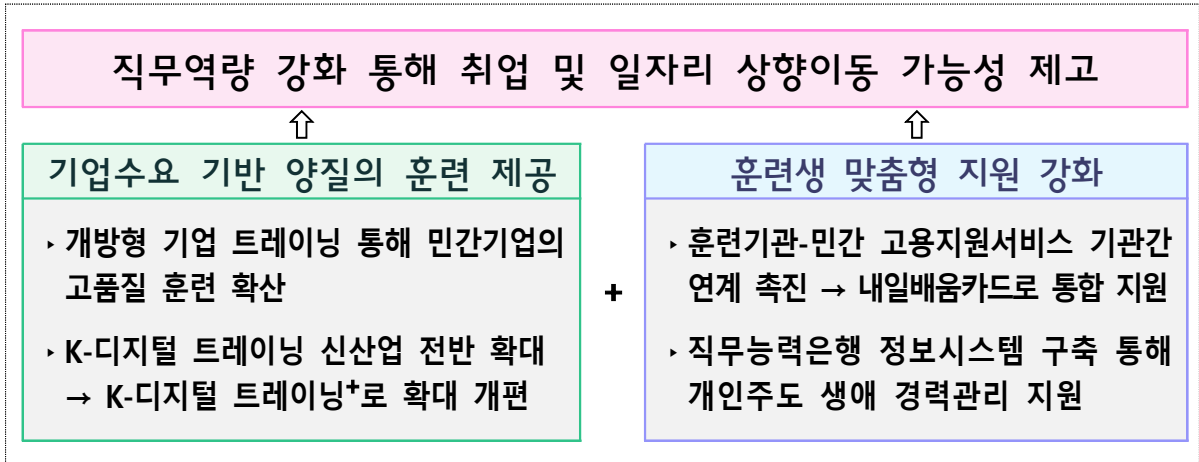
【 현장목소리 】 대학일자리+센터 부총리 청년 간담회('24.4.24일)

- ▶ "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나, 그중에 어떤 사업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는게 어려워요. 시처럼 내게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"

【 현장목소리 】 고용복지+센터 1차관 간담회('24.4.25일)

- ▶ "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있는 점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."

2 [인프라]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



【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고품질 훈련 확산】

- 민간 기업의 자사 근로자용 훈련 프로그램을 취업준비생 등 일반인에게 개방·공유 촉진

【주요 사례】디자인 교육 플랫폼 ‘○○-X’

- ▶ 국내 Top-tier급 디자인 전문 회사와 교육 전문회사가 파트너십을 통해 디자인 교육 플랫폼을 개설하여 전국 디자이너(취준생, 주니어 디자이너) 대상 공개
- ▶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제공중이며, 브랜드, 영상·광고, 인테리어 등 다방면의 직업훈련 플랫폼으로 확장 계획
- ▶ “정부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다면 지방·저소득층 학생 등 많은 훈련생들이 수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”

- 훈련과정 심사 우대*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기업 훈련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(5년간 300~500만원 지원) 지원대상으로 포함

* (현재) NCS 표준에 따른 훈련 구성 → (개선) 별도 심사 통해 훈련내용방식에 탄력성 부여

- 기업이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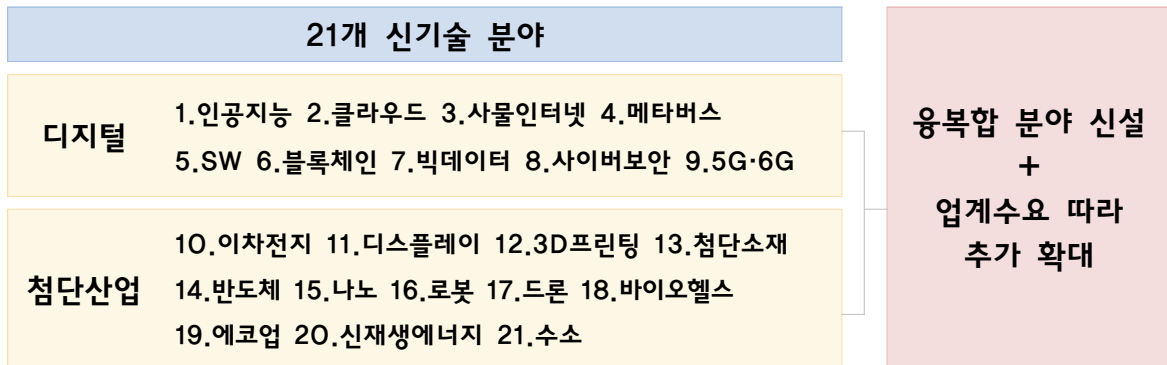
* 구체적인 포함 범위는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, 다만 수익(수강료)은 차감

※ **훈련생에게는 취업희망 산업 및 기업의 훈련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, 기업에게는 훈련생 중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제공**

【 K-디지털트레이닝을 K-디지털트레이닝⁺로 확대 개편 】

- '디지털 → 첨단유망산업 및 융·복합 분야' 등 신산업 전반으로 훈련 지원대상 업종 대폭 확대

* '24년부터 빅데이터 경영, AI 자동차 등 분야간 융복합 허용 → 업계·훈련생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



- 재직자 대상 훈련 신설 등 산업계·훈련생의 현장수요에 따라 훈련대상·인원('24년 4.4만명) 확대

- 첨단분야에 적합한 혁신적인 훈련과정 제공을 위해 훈련내용·방식 자율성 강화, 훈련비용 지원확대 등 추진

- 성과 우수기관은 훈련설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, 고성능 훈련과정은 NCS 표준단가와 무관*하게 실비지원 추진

* 현재 분야에 따라 NCS 표준단가의 130~300%限

【 현장 목소리 】 K-디지털 트레이닝 성공 사례 및 산업계 건의

- ▶ "대학에서 일본사를 전공했으나,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'23.3~7월 AI 웹 개발자 과정을 수강하고 대학 전공과 결합하여 일본 내 IT 기업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"
- ▶ "코로나 학번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 심도있는 학습 경험이 부족했으나 빅데이터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이론·실기와 프로젝트 문제해결 방식 습득"
- ▶ "신산업 분야에 인력 부족, 수료 후 바로 현장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하는 K-디지털 트레이닝이 확대되어 우수인재 유입된다면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"

【 훈련생 맞춤형 제도 개선 】

- 훈련기관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간 협업을 촉진*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'훈련부터 취업지원서비스'까지 통합 지원

* (예) 훈련기관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통합서비스 제공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
훈련기관 인증평가시 우대(가점부여)

【 현장 목소리 】 기재부 청년보좌역·2030 청년자문단 간담회('24.3.22일)

▶ "훈련기관에서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."

- 자격·훈련·교육·경력 등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애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직무능력은행 정보시스템 구축

* (1단계: '23.下) 자격(Q-net, CQ-Net), 직업훈련(HRD-net), 폴리텍학사시스템 정보 등 연계
(2단계: '24.上) 고용보험DB,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연계 (3단계: '25~) 공인 민간자격 등 연계

< 직무능력은행 연계정보 단계적 확대 방안 >



【 대중소기업 상생 훈련프로그램 신설 】

- 대기업의 우수 훈련 콘텐츠를 협력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「대중소 상생아카데미」를 신설('24년 100개)하고, 현장수요·사업성과 등에 따라 확대

| 구분 | 공동훈련센터(기존) | 대중소 상생아카데미(신설)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훈련 과정 | ▸ 시설·장비 제공 및 사용법 교육 | ▸ 프로그램 제공 및 역량평가·인증 |
| | ▸ 단기과정(1~2일 속성) | ▸ 중장기 과정(40시간 이상, 약 2개월) |
| 지원 내용 | ▸ NCS 기준단가 원칙 | ▸ NCS 기준단가 3배 지원 |
| | ▸ 지원 항목별 한도·용도 제한 | ▸ 지원 항목별 한도·용도 폐지 |

(2) [청년]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

① [직업계고] 재학시부터 졸업후까지 취업지원 강화

【 직업계고 학생 대상 고용서비스 확충 】

- (직업계고 거점학교)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, 취업·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*(현재 17개) 확대 추진

* 미취업 및 진로 미결정 졸업생에게 취업 공간 조성, 맞춤형 구직정보 제공, 진로 상담, 이력 관리 등 취업 지원

- (고용서비스 연계) 중앙·시·도 직업계고 취업지원센터와 대학 일자리*센터를 연계하여 진로탐색·취업클리닉 등 지원 강화

* 지역 내 대학일자리*센터를 활용하여 1:1 코칭 등 맞춤형 진로상담·지원

【 직업계고 학생 취업준비 지원 】

- (취업준비금 지원)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'취업준비금' 지원 추진

* 직업계고 학생조사(23) :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'자격증 취득비용 지원'이 1위(59.1%)

-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'취업연계 장려금'을 취업단계에 따라 분할지급하여 장기근속 유도

* (현재) 직업계고 졸업자가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일시금 지급 및 1년 근무 의무 발생 → (개선) 3개월 근무 시 200만원 지급, 9개월 추가 근무 시 300만원 추가 지급

- (일경험 기회확대)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보다 많은 직업계고 졸업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*

* (예) 채용시 우대요건에 '학사학위', '관련대학 전공자' 등을 규정한 경우, '관련 전공자로 확대

【 현장 목소리 】 부총리 직업계고 현장방문('24.4.22일)

▶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졸 취업자 인식 개선 필요

- "취업이나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취·창업은 어떻게 하는지, 어떤 정책과 지원이 있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" (직업계고 졸업생)
- "곧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" (직업계고 재학생)

【 취업 후 성장사다리 확충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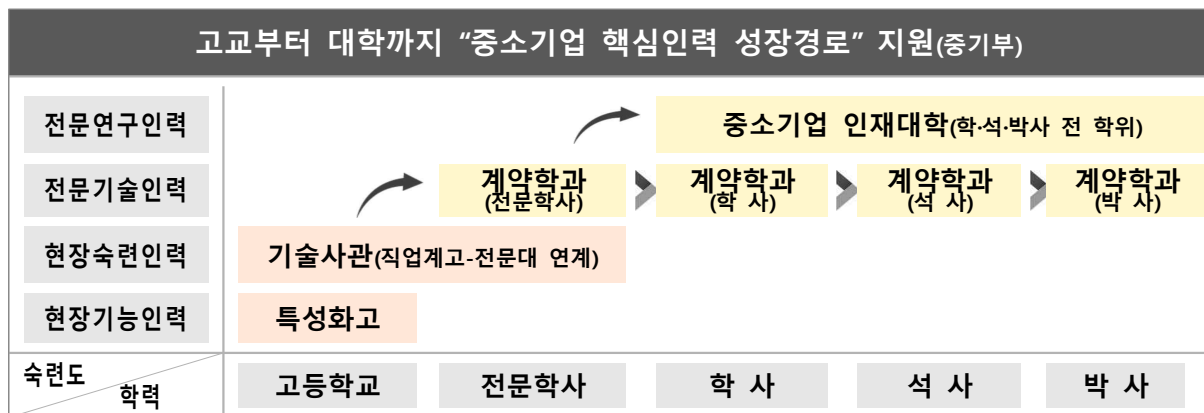
- (육성경로 구축) 「기술사관* - 중소기업 계약학과** - 중소기업 인재대학」 연계를 통해 재학·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 지원

* 특성화고-전문대기업 협업 4년제 교육과정 → 중소기업 취업 연계 → 산업기능요원 우대

** 대학-중소기업-학생(근로자) 협약 통해 맞춤형 교육(직업계고 졸업생 선발 우대 중)

-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학·석·박사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'중소기업 인재대학'('24년 6개, 400명) 지원 확대

* 학위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의 학위과정을 학사부터 박사학위까지 연계·통합 → 학·석·박사 과정 국비 지원 지속



【 주요 사례 】 중소기업 현장인력에서 박사학위 취득까지 성장한 사례

- ▶ 00팀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하여 특허출원 3건을 비롯,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국산화에 성공

【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】

- 개인의 전공·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,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* 등 추진

* (예) 기업이 직업계고 졸업 재직자에게 군복무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, 제대후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유도

- 졸업생이 군복무 이후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, 청년고용을케어플랫폼과 연계*

* (현재) 졸업후 5년까지 관리 → (개선) 군복무기간 감안하여 +2년 연장

② **(대학생)** 대학일자리+센터 기능 강화 및 저학년부터 체계적 취업지원

- 대학일자리+센터를 해당 대학 학생뿐 아니라 모든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
 - 취업스터디 및 센터 간 취업박람회 등 연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우수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*
 - * 매년 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소 2년(미흡) ~ 최대 6년(우수) 탄력적 재정 지원 중
 - 대학일자리+센터를 확대('23년 99개 → '24년 120개)하고 거점형 센터(60개)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방

【현장 목소리】 기재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('24.4.5일)

- ▶ **대학일자리+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및 멘토 인력 풀 개방, 센터간 연계 필요**
 - "대학일자리+센터의 자소서·면접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큰 도움. 센터의 우수한 프로그램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개방되면 좋을 것 같음."
 - "각 대학일자리+센터에서 운영 중인 멘토 인력 풀을 개방하고 서로 연계하여 내가 원하는 직무의 멘토와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람."

- 저학년부터 진로탐색, 취업활동계획 수립, 일경험 연계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('23년 12개 → '24년 50개 대학)
 - 대학과 지역 산업체간 연계·협업을 통한 특화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 서비스 고도화 추진

저학년 중심 Jump-up 프로젝트

- ▶ **잡케어 서비스: 학생 특성에 따른 심층 진로상담**
 - 학력·외국어능력·희망직종 입력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
→ 학생 입력 정보에 기반하여 직업 정보 제공 및 상담
- ▶ **청년미래직진프로그램: 잡케어 서비스 이수 학생 대상 진로탐색 지원 (대학에 따라 진로 교과목으로 학점 인정)**
 - (공통 과정) 국내·외 직업트렌드 탐색, 채용관계자 특강 등
 - (특화 과정) 전공별 신직업 탐색, 현직자 멘토링 등

고학년 중심 Build-up 프로젝트

- ▶ 1:1 상담 기반 '**개인별 취업활동계획**' 수립 및 계획에 따른 **직업훈련,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**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→ **1년 간 사후관리**

- 대학 간 협력 및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 확대(13 → 18개 분야*)

* (기존) 인공지능, 빅데이터, 미래자동차, 바이오헬스, 지능형로봇 등 13개 분야
(신규) 그린바이오, 차세대 디스플레이, 첨단소재·나노융합, 사물인터넷 등 5개 분야

③ [군복무] 군복무 중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준비 지원 강화

- **(일반병) 군복무 중 역량개발** 지원을 위해 **원격강좌**(現 연간 12학점) 및 **복무경력**(現 학교당 1~4학점)에 대한 **이수인정 학점·대학 확대*** 추진

*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범위內 원격: 年12학점, 훈련·교육: 졸업학점의 1/4) 대학별 학칙 개정 등

- **취업맞춤특기병*** 모집 특기를 **확대**하고 개인의 전공별 희망진로 등에 따라 **맞춤형 특화 기술직무 교육 제공****

* 입영전 기술훈련후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, 취업연계(현재 육해공군 등 76개 특기 모집중)

** 기술직무 이해 및 체험, 진로-취업 컨설팅(1:1 상담)

- **장병내일준비적금*** 납입한도·매칭지원금 **확대**(각각 월 최대 40만원 → '25년부터 55만원)를 통해 **전역 후 원활한 사회진출** 지원

* 장병의 월 납입액에 정부지원금을 매칭 지원하고,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 중

| 구 분 | '22년 | '23년 | '24년 | '25년~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매칭비율 | 33% | 71% | 100% | 100% |
| 납입한도(=지원한도) | 40만원 | 40만원 | 40만원 | 55만원 |
| 전역시 지원금 | 254.5만원 | 541.2만원 | 720만원 | 990만원 |
| 전역시 총 수령액 | 1,003만원 | 1,290만원 | 1,469만원 | 2,019만원 |

- **(단기 부사관장교) 5년미만 단기복무 전역예정 간부도 내일배움카드**를 통해 **직업훈련**을 받을 수 있도록 **개선***하고, 구직 **청원휴가** 신설(3~5일)

* 현재 5년이상 중장기 복무후 전역예정 간부만 발급 대상→ 단기복무 간부까지 포함

- **제대군인지원센터, 고용센터, 창업진흥원**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**전역 후 취·창업 컨설팅 등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추진***

*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지원 관련 제대군인지원센터 이용대상을 전역후 3년 이내 의무복무 간부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가 검토

- **단기복무 간부 대상 취업·주거 지원*** 및 **장병 맞춤형 경제교육** 실시

* 주택수당 신규 지급('24년~), 어학·IT 등 자기개발 학습콘텐츠 무료지원 등

- **대학교육과 군복무, 국방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** 연계를 통해 이공계 우수인력 취·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**‘한국형 탈피오토’ 도입**('26년~)

※ 이스라엘 탈피오토(Talpiot Program): 과학분야 엘리트(50여명)을 선정하여 명문 대학에서 3년간 학사과정과 군 훈련을 병행하고, 졸업후 장교로 의무복무하는 제도

【 현장 목소리 】 기재부 청년보좌역·2030 청년자문단 간담회('24.3.22일)

- ▶ “군복무 시절 원격 강좌를 통해 학점을 최대한 많이 이수하고 싶었지만, 선택권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. 온라인 강의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.”

④ **【구직자】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공개 유도, 일경험 지원, 쉬었음 예방**

【 신규 일자리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공개 유도 】

- 신규채용 일자리의 임금·근로시간·업무내용 및 복리후생 등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상세 근로조건 공개 확산 유도

- **(민간기업)** 정보제공 노력의무 부여 등 채용절차법 개정 등*을 통해 신규채용 공고 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 촉진

* '24년 공정채용 컨설팅 매뉴얼 및 경진대회 평가요소에 관련내용 반영

- **(공공부문)** 신규채용 공고 시 기존 임금 정보 이외의 상세 근로조건*을 적극 공개하고 구직자 편의성 증대**

* 의료비·학자금·선택적복지 등 복리후생비, 휴가·휴직, 휴직급여, 퇴직금 등

** (현재) “잡알리오” 공고상 보수복지후생 등에 관해 ‘관련 규정에 의함’ 표기사례 多 (개선) 근로조건 관련 운영현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게시

【 주요 사례 】 신규채용 공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

- ▶ 설문 대상자 중 75.8% “채용시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”, 85% “불충분한 임금 조건 공개에 대해 ‘문제 있다’고 답변” (‘18.6월 국민권익위 조사)

【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선정제도 개편 】

-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선정제도(고용부·중기부)를 통합·운영하고, 개별적으로 부여되던 고용장려금·정책자금 우대 등 통합 지원

- **(청년일자리강소기업^{가칭})** 청년친화강소기업^{고용부}과 인재육성형중소기업^{중기부} 통합 →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우대, 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 종합 지원

* (고용부) 정기 세무조사, 재정금융 우대 / (중기부) R&D수출지원정책자금 한도 우대 등

- **(참관참여강소기업^{가칭})** 참관참여중소기업^{중기부}과 강소기업^{고용부} 통합 → 고용창출장려금 등 선정 시 우대, 기업홍보·채용지원 등 종합 지원

* (고용부) 고용창출안정장려금 등 선정 우대 / (중기부) 워크넷 등에 전용채용관 개설 등



【 민간 일경험, 청년 공공기관 인턴 지원강화 】

- (민간)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인원('24년 4.8만명) 확대 및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
 - 현장 수요에 따라 인턴형(1.9만명), 프로젝트형(0.6만명), ESG지원형(0.8만명), 기업탐방형(1.5만명) 등 일경험 프로그램 발굴·확대

【 현장목소리 】 대학일자리+센터 취업준비청년 간담회('24.4.24일)

- ▶ “실제 기업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파악 곤란 → 중소기업과 학생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필요.”

- (공공) 청년들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('24년 1.0만명)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청년인턴(3개월 이상, '24년 2.2만명) 지원 지속 강화
 - 채용형 인턴을 확대('24년 0.3만명)*하고, 우수인턴에 대한 취업 인센티브** 부여
 - * 목표: 공공기관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의 5% 이상
 - ** (예) 공공기관에 원서 제출 시 (평가 탁월) 서류 면제, (우수) 서류 가점 5% 등
- (청년 일경험 플랫폼) 공공·민간 일경험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, 청년 맞춤형 매칭 서비스 제공
 - [1단계] '24년 정부·공공기관 및 일경험 참여기업 관련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→ '25년부터 서비스 제공
 - [2단계] 지자체·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는 플랫폼 구축 → '26년부터 서비스 제공
 - [3단계] 청년 일경험 플랫폼을 「고용24」 등 고용 관련 플랫폼과 연계하여 구직자 맞춤형 통합 고용서비스 제공

【 현장 목소리 】 고용노동부 일경험 프로그램 간담회('23년)

- ▶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·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
 - “취업 관심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멘토를 통해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음. 더 많은 사람들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음”(프로그램 참여자)
 - “일경험 프로그램은 일경험 기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재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며, 동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음”(기업 대표)
 - “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재 재직 중인 기업 취업에 성공. 이 경험을 살려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”(멘토 참여자)

【 청년 쉬었음 예방 및 탈출 지원강화 】

- (예방: 미취업·입직초기) '24년 신설된 '청년성장프로젝트'를 계획보다 대폭 확대*하여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 예방

* (당초계획) 10개 시·도 → (확대) 16개 시·도 및 28개 시·군·구 공동 운영

-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,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 청년카페 마련('24년 62개소 운영 예정)

- (복귀: 구직단념청년) '6개월 이상 쉬었음'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지원하는 '청년도전지원사업' 참여인원 추가 확대*

* (당초계획) '24년 9,000명 → (확대) '24년 9,639명

※ 청년도전 지원사업 주요내용

- ▶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, 모집해 1:1상담·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(단기(5주), 중장기(15주, 25주)) → 국민취업지원제도·직업훈련 연계
- ▶ 참여 청년에 참여수당(최대 250만원) 및 이수 시 인센티브(20~50만원)를 지원하고,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추가 인센티브(50만원) 지원

- 구직단념청년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중·장기 유형 등 프로그램 다양화, 청년성장프로젝트와의 연계·통합 추진으로 맞춤지원 강화

- (탈출: 고립은둔청년)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, 외부외출이 거의 없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^가청년미래센터 시범 설치·운영(2년간)*

* '24년 4개소 선정(인천·울산·충북·전북) →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확대

-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·재적응을 위해 사회관계 형성, 공동생활, 자조모임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*

* 초기 상담을 통해 고립정도에 따라 유형화 후 마음회복, 사회관계형성, 공동생활 (은둔청년특화) + 소통교육, 자조모임 등 맞춤형 지원

※ 제1차 「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」('23.11)의 정책성과를 연중 점검하여 제2차 대책 마련 추진('24.下)

5 [재직자]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및 주거지원 강화

【중소기업 재직 청년 중심 복지지원 및 장기근속 유인 강화】

- **(중기사랑카드 신설)**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·민간이 공동참여하여 중소기업 복지혜택을 통합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중기사랑카드 신설 추진
 - * 관계부처 TF(기재부 등 관계부처)를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 마련('24.上)
- **(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)** 현장 수요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(당초 '24년 限)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 검토
 - 업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지원업종* 확대
 - * 현재 제조업과 관계부처가 선정한 빈일자리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
- **(중기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절차 개선)** 중소기업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혜택을 편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*
 - * 홈택스 시스템 지속 점검, 원천징수 의무자 협조를 위한 안내 지속

【중기재직청년을 비롯하여 청년층 주거지원 확충】

- **(청년 맞춤 주거공급)**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유휴 국유지* 및 공공기관 비핵심 부동산** 등을 청년 임대주택 등으로 개발
 - * 舊부산남부경찰서, 종로 복합청사 개발 등을 통해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
 - **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구 본사, 지사 통폐합에 따른 미사용 유휴 부동산 등
-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거+사무 일체형 청년주택 모델 확대 및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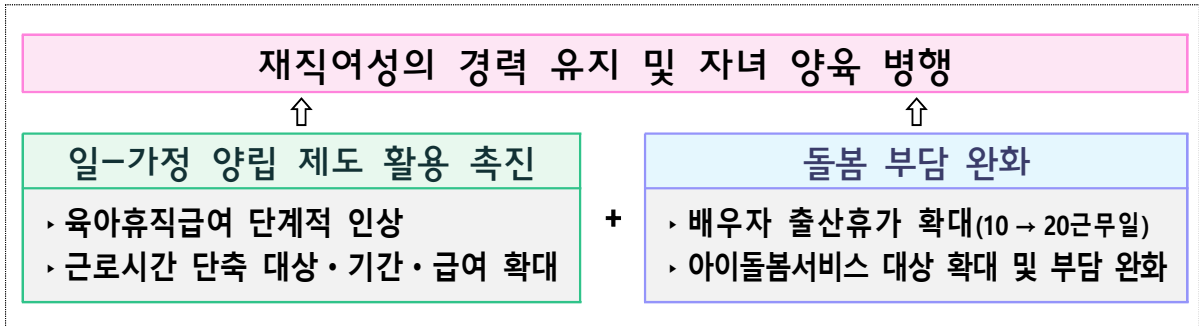
【현장 목소리】 기재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('24.4.5일)

- ▶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시설 지원 필요
- "청년 창업인들은 당장 근로소득도 없고, 자금부담이 크므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해요."

- **(중소 일자리 연계)** 디딤돌 대출시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우대금리를 도입* 하고, 지자체 협의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확대 추진
 - * 0.2%p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, 시장여건·기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
-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* 공급 확대 및 이를 중소기업 기숙사로 활용 시 공공주택 사업자가 별도 입주자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
 - * 중소기업·산업단지 근로자,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종사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(임대료 인근 시세의 35~90% 수준)

(2) [여성]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

① 여성 경력단절 예방: 일가정 양립 촉진 및 돌봄 부담 완화



○ (일-가정 양립) 육아휴직 등 일-육아지원제도 활용 촉진 기반 조성

- 육아휴직급여*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소득대체율 제고

* 현재 통상임금 80%, 月 상한 150만원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·기간·급여 확대*(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)

* ① 연령: (현재) 초등 2학년(8세) → (개선) 초등 6학년(12세)
 ② 기간: (현재)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→ (개선) 최대 36개월
 ③ 급여: (현재) 주 5시간 → (개선) 주 10시간 통상임금 100% 지원

- 기업 수요 등을 감안, 재택·원격근무, 시차출퇴근,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* 확대

* (예) 유연근무장려금('24년 6,400명,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月 최대 30만원),
 근태관리·정보보안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('24년 850개사), 컨설팅('24년 400개사)

-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촉진 위해 사업주 지원금 신설제*

* (예) '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을 부활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,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 검토

【현장목소리】 고용노동부 워킹맘 간담회('23년)

- ▶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'돈' 때문
- ▶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제도, 활성화 필요
- ▶ 소규모 사업체에서 한 명이 빠지면 업무공백이 너무 크고, 대체인력 채용과 교육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→ 숙련도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

○ **(돌봄)** 부모 맞돌봄 확산 촉진,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

-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(10 → 20근무일)으로 확대하고,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·육아휴직* 사용 허용

* (예)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,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

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(現 중위소득 150% 이하)을 완화하고, 본인부담비율(現 15~85%) 하향 조정

- 고령자* 등 돌보미 인력 확충, 민간 돌봄서비스 활용** 등을 통해 돌봄인력 공급 확대

* 현행 노인일자리 활용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운영 등

** 민간 돌봄인력 관리 강화(민간 제공기관 등록제)를 전제로,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경감

【 현장목소리 】 돌봄 관련 실태조사('22년)

- ▶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필요('22년 모성보호제도 활용 실태조사, 여성정책연구원)
 - “개선사항 설문결과, ①기간 확대(24.7%), ②미허용시 사업주 처벌 강화(20.8%), ③아빠의 출산휴가 분위기 확산(19.4%), ④분할사용 횟수 확대(14.4%) 順”
- ▶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('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, 여성가족부)
 -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경험은 있으나 이용 경험이 없는 가구의 대다수(87.9%)가 대기 중 신청을 취소했으며, 현재 대기중인 가구의 평균 대기기간 약 6개월

○ **(문화 확산)** 민간·공공부문 일-생활 균형경영 문화 확산

- **(민간)** 유연근무 활용 등 일-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* 마련,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 제공 및 세제혜택 검토

* ① 유연근무제도 활용도, ② 육아지원제도 활용도, ③ 경단여성 활용, ④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등을 포함한 평가지표 마련

-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 대상 일-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 신규 도입(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)

- **(공공)** 공공기관이 육아시간 특별휴가·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·적용하도록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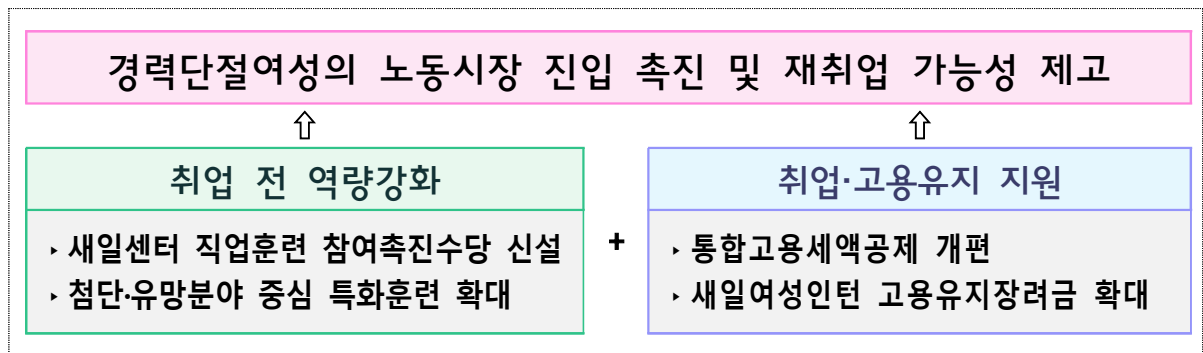
* (현재) 수은, 행정研, 고용정보원 등은 내부규정으로 육아시간 특별휴가 시행 (개선) 『공공기관 혁신지침』에 ❶육아시간 특별휴가 적극 도입 ❷난임휴직 적극 적용 등 규정 추가

▪ 공공기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촉진을 위한 초과현원 해소기간 확대(현행 3년) 등 제도개선 검토

▪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내 일-생활 균형 관련 노력 우대방안* 검토, 관련 공시항목 추가(現 7개)

* (예) 배점 상향, 관련 평가기준 구체화 등

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



○ **(직업훈련)**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특화훈련 확대

-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, ^{가칭}참여 촉진수당(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) 신설·지급

- 새일센터 직업훈련을 첨단·유망 분야* 중심으로 확대 개편**

* (예) Chat-GPT(생성형 AI) 활용 마케팅 실무, AI 활용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등

** 전문기술·고부가가치 직종 과정 확대 : ('23년) 162개 → ('27년) 200개 이상

【 현장목소리 】 새일센터 상담사례('23년)

▶ 30대 경력단절여성 “결혼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길어져 업무 스킬, 문제해결 능력 등이 부족함이 느껴짐.”

▶ “기술발전·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첨단·유망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.”

○ **(취업)** 경력단절여성 채용·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인 '경력단절여성'의 재취업 업종제한* 폐지, 경력단절남성 포함**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

* 현재 "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"의 기업에 재취업시에만 지원

** 현재 우대지원 대상 : 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

【 현장목소리 】 기재부 2030 청년자문단('24.4.5일)

- ▶ "통합고용세액공제는 '경력단절여성'의 범위를 前 직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."
- ▶ "비록 소수지만 남자도 상황에 따라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데,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"

-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('24년 7,777명)를 단계적으로 확대*하고, 첨단·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재설계*

* (예) IT·바이오 등 유망 분야 직업훈련의 인턴-채용 연계형 과정 등

-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*

* (현재)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, 개인 60만원 지원
(개선)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

- 가칭 워라벨 행복산단을 선정하여 산단 내 입주기업에 육아 지원제도 컨설팅, 대체인력 활용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제공('24년 연구용역)

* 지역별 거점 산업단지 선정 → 지자체·산단·고용유관기관(고용센터, 산업단지공단, 인재채움뱅크)이 협업하여 경단여성·대체인력 채용 및 일-생활 균형 컨설팅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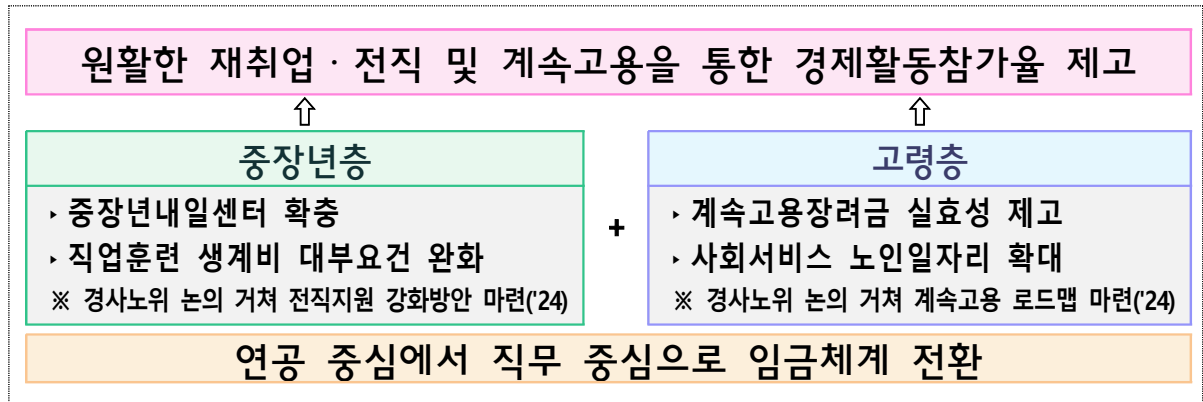
○ **(고용유지)** 재직여성·육아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

- 재직여성에게 고용유지서비스*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('24년 80개소)하고, 경력단절위기 근로자 대상 컨설팅 강화

* (예) 직무별 멘토링, 노무·경력개발 전문상담, 심리·고충·퇴사상담 등

- 육아휴직자 대상 노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빠른 직장 적응 지원

(3) [중장년·고령층] 주된 일자리 퇴직자고령층 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



1 중장년층 전직지원 강화

- **(전직준비)** 중장년내일센터·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 지속 확충,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 제고

- * ① 전직스쿨 지원대상: 40세 이상, (현재) 1년 이내 퇴직예정자 → (개선) 누구나
- ② 생애경력설계서비스: e러닝(온라인·모바일) 서비스 신규 제공('24.下)

- 산업·지역별 채용수요 발굴 → 적격 구직자 선발 → 맞춤형 직무교육 등 집중 채용연계서비스 제공 확대('24.下)

- * ('23년) 시범 도입 → ('24.上) 사업 성과평가 ('24.下) 서비스 개편·확대

- 1,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

- ▶ **(현재)** 이직예정일 3년 이내 50세 이상 근로자 대상 진로설계(16h), 상담·취업알선(2회), 취창업 교육(16h) 중 하나 이상 서비스 의무 제공(고령자고용법)
- ▶ **(개선)** 복합서비스(진로설계+교육, 교육+취업알선 등), 근로시간 단축 청구 허용(총 40시간 이상) 등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

-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,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등 지원

- * 지원내용: 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, 담당자 교육,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 등

-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해 모니터링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* 검토('24.下 연구용역 → '25년 제도개선)

- * (예)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활성화, 1,000인 미만 기업의 자율적 재취업 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원 강화 등

- **(직업훈련)** 디지털·저탄소 산업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훈련 인프라* 확충 및 첨단·유망 분야 온라인 콘텐츠 개발 지속 확대

* (예) 산업구조 변화 대응 특화훈련('24년 2만명),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('24년 2,550명) 등

-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촉진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('24.6월~)

* 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대상 중위소득 80% → 100% 이하

※ 경사노위 계속고용촉진 사회적 대화('24.5월~)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「**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**」 발표 추진('24.下)

2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계속고용 촉진

-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* 실효성 제고방안** 마련

*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시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

** 고용영향평가(~'24년말), 현장의견 수렴 등 통해 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 검토

※ 경사노위 계속고용촉진 사회적 대화('24.5월~) 결과를 반영하여 「**계속고용 로드맵**」 마련 추진('24.下)

- 민관 협력형 일자리, 지역돌봄 수요, 시설 안전점검 등 사회 서비스 영역의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·확대*

* 민간·사회서비스형 : ('23) 27.5만명 → ('24) 37.6만명(+10.1만명)

3 연공 중심에서 직무·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 지원

- **(인프라 구축)** 기업 스스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범용모델·통합정보시스템("Ko-net")* 구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기반 마련

* 직무·성과 기반 인사관리 위해 필요한 업무역량, 시장임금정보 등 제공하는 시스템

- **(컨설팅 지원)** 개편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환 컨설팅을 추진*하고, 이를 바탕으로 직무·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

* '24년 3개 업종 컨설팅(자동차부품업, 조선업, 석유화학업) 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'25년 추가 업종 선정 등 검토

- **(인증체계 구축)** 직무·성과를 반영한 임금체제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평가·인증체계*를 구축하고, 해당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연계

* (판단기준) ①직무평가, ②직무가치 반영 임금체계 도입(노사합의 및 규정반영), ③적용비율 등

◇ 대화·타협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노동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, 기업의 활력 강화

-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일자리 창출, 이중구조 개선으로 약자 보호

1 법과 원칙 토대 위의 대화·타협 관행 정착

- (대화·타협 관행 정착)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법적 교섭 촉진으로 노동시장 예측 가능성과 기업경쟁력 강화
 - 자율적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정·화해 기능 활성화
 - 노사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지속,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
- (노사 상생의 일터) 사측의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근절,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, 노조의 불합리한 파업 관행 개선

2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

- (일하는 방식 개선) 생산성 향상과 일·생활 균형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
- (유연근무제 확대) 근로시간 법 규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업무매뉴얼 현대화 및 유연근로* 확산 추진

* ▲ 선택적 근로시간제, ▲ 탄력적 근로시간제, ▲ 재량근로시간제 등

- (직무·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) 임금의 연공성이 과도하여 개편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
 - 범용모델·통합정보시스템("Ko-net") 구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기반 마련 및 임금체계 전환 기업에 대한 평가·인증체계 마련 등
- (계속고용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)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중·장년 계속고용 활성화*

* 임금체계 개편 촉진, 전직·재취업지원 등 다양한 계속고용 모델 도입

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

- **(원하청 상생 촉진)** 상생협약 등*을 토대로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 과제를 발굴·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상생모델 확산
 - * 조선업 상생협약('23.2월), 석유화학('23.9월)·자동차('23.11월)·경남·항공우주('24.2월)·충북·식품제조('24.2월)업 공동선언<공동선언을 토대로 협약체결 추진>
- 하청기업 생산성 향상,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부처 협업과제도 지속 발굴·추진
- **(대·중소기업 상생일자리)** 상생일자리 사업단('24년 10개 사업단)을 통해 청년 구직자 취업역량 제고 및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강화
 - * ('24. 참여기업(안)) 포스코, 현대자동차, 에어서울, 롯데홈쇼핑 등
- **(노동시장 약자 보호)**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강제·구속수사 강화, 청년 다수·취약 사업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
 -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* 기획감독, 30인 미만 기업 대상 6대 취약분야**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
 - * 임금체불, 차별없는 일터, 장시간 근로, 부당노동행위
 - ** 청년, 여성, 외국인, 장애인, 고령자, 건설
- **(미조직근로자 지원)** 미조직근로자*의 참여·소통 및 상담·지원** 등을 위한 '근로자 이음센터' 신설(전국 6개소, 4~5월)
 - *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, 노동관계법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
 - ** 공간대여, 상담프로그램 운영, 법률상담, 고용센터 연계 지원 등
 - 미조직근로자 타운홀 미팅, 온라인 토론회 등 온·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정책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
 - *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전담 부서 신설 추진 ^{가칭}미조직근로자지원과(고용부)

◇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, 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관계 의식·관행 및 법·제도 개선 추진

◇ 법·제도 개선 이전에도 정부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여, 노동개혁의 토대 마련

2. 능력·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

◇ 미래세대가 능력과 노력에 기반하여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에 따른 **교육격차 완화**, **다양한 성장경로** 구축

① **(초·중·고)**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충분한 능력개발 기회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 강화

-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·지원하기 위해 **꿈사다리 장학금**을 **초등학생**까지 확대

- 초기단계 학업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저소득층 **1:1 멘토링** (영재키움 프로젝트) 및 **기초학습 지원**(드림스타트) 대상확대

- 저소득층 학생 예술영재교육 활성화 등 교육분야 다양화, **맞춤형 사교육 경감대책** 지속추진 등 공정한 교육기회 확충

② **(직업계고)**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인재양성 지원강화

- **공공기관 고졸채용** 비중을 확대하고, 취업·후학습 등을 종합지원하는 **직업교육 혁신지구** 확대

-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계고 학과를 재구조화하고, 전공과 신기술분야를 연계한 **마이크로교육과정** 추가 선정

③ **(대학생)** 저소득층 대상 **국가장학금** 지원강화 및 주거장학금 신설 등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확충

- **희망사다리 I 유형(취업연계)** 장학생 선발시 경제적 취약계층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발

- **대학 편입제도 개선** 등 통해 대입 이후 도전기회를 확대 하고, 사이버대 활성화 등 다양한 도전경로 보완

◇ 유보통합·늘봄학교 등 국가책임 교육, RISE·글로벌대학 등 대학개혁,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등 **교육개혁 병행 추진**

1 (초·중·고)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강화 및 교육분야 다양화

1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프로그램 확대

- 꿈사다리 장학금(현재 중1~고3 지원중)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·지원

* 초등 5~6학년 대상으로 지원 → 4년간 지원 후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 지원 검토

【 현장 목소리 】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('24.2.13일)

▶ "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"

- 영재키움프로젝트 초등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하고,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(현재 720명) **확대 검토**

*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(교육부·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)

** (현재) 초등학교 4학년~고등학교 3학년 대상 → (개선) 초등학교 3학년 과정 신설('25~)

-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드림스타트* 사업 (한국형 Head Start) **지원대상 확대 검토**

* 12세 이하 취약계층 대상 가정방문을 통해 기초학습 등 아동발달 조기 지원

** (현재) 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계층), 한부모가정

2 디지털·IT·예술 분야 확대 등 저소득층 교육분야 다양화

- SW·AI 특화 교육과정 확대(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) 등 미래세대 성장경로 다양화, 저소득층 대상 예술영재교육* **활성화 추진**

* (예) 한국예술영재교육원: 사회적배려 대상 청소년(초3~고3, 기초생활수급자) 대상 전형 운영 + 무료 교육지원(음악·무용·전통예술·융합예술 분야)

3 사교육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체계 구축

- 유·초·중·고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교육 경감 대책 지속 추진

| 유아 | 초등 | 중·고 |
|--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유보통합 모델 마련 ·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 | +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늘봄학교 전면 운영 (전 학년 늘봄 도입 등) | +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수능-EBS 연계, 킬러문항 배제 · 다양한 방과후 활동 확대 |

※ '24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명당 월평균 약 23만원 혜택 추정(교육부)

- 학생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**교습비 초과징수 모니터링*** 및 **시·도교육청 책무성** 강화** 등 추진

* 학원이 관할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

** 시·도교육청 평가 시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 및 성과 반영('24년~) 등

2 (직업계고) 교육기회 격차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

①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고 인재양성 지원강화

-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직업계고·지역·기업·대학이 협력하여 일경험·취업·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* 확대

* '24년 13개→'25년 추가 지정(선정 지구에 재정지원(광역 10억원/기초 5억원))

【 주요 사례 】 직업교육 혁신지구 우수 사례

- ▶ (진주·사천·고성) 항공정비 기업(KAEMS) 및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취업연계형 현장실습, 항공정비학과 진학, 항공정비 기업 취업 등 항공정비분야 인재 양성 지원
- ▶ (전북) 지역전략산업(스마트농업 등) 선취업-후학습 인재 성장 프로그램(취업 ha-JOB) 운영
: (고1~고3)산업 맞춤형교육→(고3)지역기업 선취업→(고3~대4)일학습 병행→(졸업 후)지역 정착 지원

- 사내대학* 설립·운영 규제 완화**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취업 후 학습을 통한 지속 성장 지원

* 기업에서 재직자 등 대상으로 대학(평생교육시설)을 설립하여 교육과정 운영(현재 8개교)

** (설립주체) 200인 이상 사업장→산업단지 입주기업 연합체, 중소기업 연합체까지 확대
(교육과정) 대학→대학원까지 확대, (입학대상) 재직자 등→채용후보자까지 확대

② 신산업 분야 학교·학과로 재구조화하여 선택권 강화

- (**학과 개편**) 직업계고 학과를 AI·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,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*('24년 10개) 추가 선정

* (예) 확장현실과 인공지능(미림여자정보과학고), 자율주행차(경기자동차과학고) 등

- (**학생 선택권 확대**) 협약형 특성화고,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* 등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집중 양성

* 반도체·디지털 등 추가 지정하여 '27년까지 57 → 65개교로 확대

-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기술 중점지원 학교*를 확대 지정·운영

* 혁신성장, 초격차, 친환경 등 신기술 분야 맞춤형 개설·운영 등(8→20개교)

③ 고졸 학생 공공기관 취업지원 강화

-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*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 확산 유도

*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기준(8%) 상향 검토 및 고졸인재 채용 우수사례 확산

3 (대학생)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및 도전 기회 확대

①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강화

- (장학금) 저소득층 중심으로 재정지원 장학금 지원을 확대
 - (취업연계 장학금) 희망사다리 I 유형* 장학생 선발 시 경제적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 우선 선발
 - *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학생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(학기당 200만원) 지원 중
 - (주거장학금)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·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장학금 신설(최대 年 240만원)
 - (국가장학금)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(100→150만명)하고, 저소득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도 확대(14→20만명)

【 주요 사례 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'24.3.5일)

- ▶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들이 없도록 국가장학금 제도 대폭 확대
- ▶ 국가장학금 수급대상 150만명으로 확대, 근로장학금 20만명까지 확대, 주거장학금 신설

② 도전 기회 확대를 위한 대학 편입제도 개선 검토

- 4대 요건(교지·교원·교사·수익용 기본재산) 중심의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 추진 →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 확대

* 편입학여석 = (전년도 1·2학년 결손인원 × 산정비율) + 신입학 미충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
↳ 4대 요건(교원·교지·교사·수익용 기본재산) 확보율에 따라 산정비율 상이
(확보율 70% 미만 대학은 결손인원 100명 발생시 15명만 편입 충원 가능(이월인원 제외))

③ 이공계 지원강화, 사이버대 원격교육 혁신모델 등 성장경로 다양화

- (이공계)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 및 연구생활장학금 도입
- (사이버대) 소외계층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, 교수-학습 방법 개선 등 원격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

구조개혁 수요맞춤 인재양성, 교육기회 확충 등 교육개혁 가속화

◇ 저소득층 중심 초·중·고, 대학생 지원 강화 등 사회이동성 과제 추진과 함께 기존 교육개혁도 가속화

① 인재양성 전략회의, 산학협력 활성화 등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

- SW·AI 등 첨단산업 분야* 인력수요 대응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양성전략 수립 →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마련
 - * ^A모빌리티, ^B바이오헬스(23.4), ^C반도체(22.7), ^D디지털(22.8), ^E환경·에너지(23.5)
-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및 국가인재양성기본법* 제정을 통한 법제화 추진
 - * △인재양성전략회의, △국가인재양성기본계획, △인재데이터 연계·활용 등
- 우주산업·AI·로봇 등 유망 신산업 인재양성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산·학·연·관 긴밀한 협업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
- 기업·대학 공동연구 중심 석·박사 학위과정 '산업학위 도입' 등 산업 현장중심 기술인력 양성·공급시스템도 구축

② 대학개혁을 통한 청년의 성장을 위한 기회 확대

- (대학교육 혁신) 대학 학과·전공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여 전공-일자리 미스매치 완화
 - 선도대학은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과감히 지원하고,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*,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도 지원
 - * 신입생 선발시 무전공으로 선발 → 소질·적성에 맞는 전공 탐색 기회 제공
 - 대학개혁이 학생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*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통계·공시정보 확대**도 검토
 - * 정보를 쉽게 검색·편집·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→ 사교육 업체가 공시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대학학과별 특징점 등 대입 관련 정보를 대학공시를 통해 우선제공
 - ** (예) 중계열(101개 분야)별·권역별 평균급여, 국가장학금 지급현황 등
- (규제개선)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확대
 - 규제혁신, 교육부 대학 관련 권한 이임, 산학협력·평생교육·지역혁신·학생지원 등 분야 보장을 포함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

③ 교육격차 완화,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**교육기회** 확충

- **(유보통합)** 생애 초기단계부터 발생하는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 실시 → 0세부터 수준 높은 교육·돌봄 제공
 - 유보통합 추진 계획(안) 발표('24.上) 및 지방단위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법률(지방교육자치법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) 추진('24.下)
- **(늘봄학교)** 초등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*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격차 해소, 재능개발 기회 확대
 - * 체육, 문화·예술 등 학생·학부모 수요 높은 분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 - '24.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산하고,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차별 확대*
 - *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: ('24) 초1 → ('25) 초1~2 → ('26) 모든 초등학생

④ **디지털 기반 교육**을 통한 **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** 지원

-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학생별 학습진단 및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교육 내 학생 맞춤교육 실현
 - AI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('24.下) 및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('25.3)
 - 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활용 지원을 위한 '초·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(안)*' 수립('24.5)
 - * 디바이스 보급관리 현황 점검개선, 학교 네트워크 환경 개선, 인프라 전문인력 자원체계 구축

⑤ **지역·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** 구축

- **(RISE)** 시도 전담조직·지역 RISE 센터 등 RISE 추진체계를 구축('24.上)하여 RISE 체계* 본격 도입('25)
 - * 산학협력(LINC 3.0), 평생교육(Life), 전문직업교육(HiVE) 등 기존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및 대학의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
- **(글로벌대학)** RISE 체계 속에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대학 추가 지정('24, 10개 내외)

3.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

- ◇ 일자리,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 유인 강화 및 자산활용도 제고, 연금소득 기반강화를 통한 소득안정성 확충
 - (미래세대) 납입·비과세한도 대폭 확대한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 ISA 전면개편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
 -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ISA 경쟁촉진 3중세트 추진
 - ① ISA 공시범위,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(수수료 한정 → 상품리스트 등)
 - ②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유도(은행의 신탁형 ISA내 제공상품 확대 등)
 - ③ ISA 이전방식 편의성 제고 → 이전현황, 소요시간, 이전방식 등 점검
 - 통합형 ISA 도입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종합개선 방안을 검토하고, ISA계좌내 손익통산 확대 적용 추진
 - 납입(2배)·비과세한도(25배)를 확대하고, 국내투자형 ISA 연내 신설
 - (중고령) 국민연금 연금공백기 보완,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 도입 등 자산축적·유동화 촉진 통해 노후소득기반 강화
 -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응하여 연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방안 마련 검토
 -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) 매각 후 연금계좌 납입시 세제 지원하는 부동산연금화 촉진세제 도입
 - 쏠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검토 등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('24.上)
- ◇ 연금개혁,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일자리,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 유인 강화

①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한 ISA* 전면 개편

※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손익 통산,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

① (세제지원) 납입한도 2배, 비과세 한도 2.5배 확대하고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 연내 신설

* 납입한도: 연간 2천만원(총 1억원) → 연간 4천만원(총 2억원)

* 비과세한도: 200만원(서민형 400만원) → 500만원(서민형 1,000만원),
[국내투자형은 1,000만원(서민형 2,000만원)]

② (경쟁촉진)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'경쟁촉진 3중세트' 추진

i) (공시 범위 확대) 공시 범위, 방식 등을 점검하고 공시 범위 확대* 검토

* (현재) 수수료만 공시 → (개선) 수수료 외에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도 공시

ii) (제공상품 확대)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 유도 검토

* (예) 은행의 신탁형 ISA의 경우 제공하는 주식 및 ETF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 존재

iii) (이전제도 활성화) 이전 현황, 소요시간, 이전 방식 등을 점검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전방식 검토

③ (혼합형 ISA 등) 유형별(중개·신탁·일임형)로 구분된 ISA 통합 등 종합적 개선방안 검토

- 1인 1계좌 원칙으로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 연구

| 유 형 | 중개형 | 신탁형 | 일임형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된 편입자산 | 펀드(수익증권, ETF, 리츠), 국내상장주식 등 | 펀드(수익증권, ETF, 리츠), 예적금 등 | 펀드(수익증권, ETF, 리츠) 등 |
| 투자방법 | 가입자가 직접 운용 | | 일임업자가 운용 |
| 가입기관 | 투자중개업자(증권사 등) | 신탁업자(은행·증권사 등) | 투자일임업자(은행·증권사 등) |

④ (손익통산)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ISA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익통산* 확대 추진

* 상장주식 양도손실은 ISA내 다른 이자·배당소득에서 공제

②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 지속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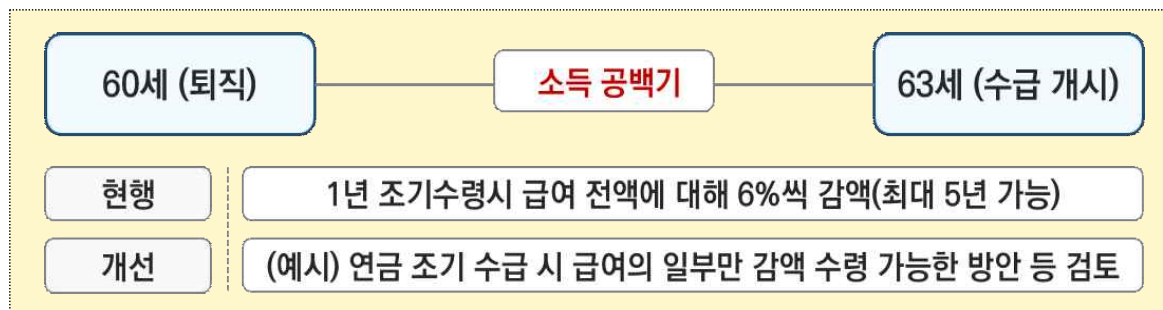
- (지원수준 강화)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유지(‘24년 세법개정안 반영) + 정부기여금도 60%까지 지급
 - * 현재 가입 5년 내 중도해지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정·정부기여금 미지급
- (내집마련 연계)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신규 출시(‘25년)

【 주요 사례 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‘24.3.5일)

- ▶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요건 개선 → 3년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시 혜택 유지
- ▶ 청년들의 수요가 충족되도록,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% → 250% 이하로 완화

③ 연금소득 기반 확충 및 활용도 강화

- (국민연금 활용도 제고) 가입연령-수급연령 일치 및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한 급여 일부 감액수령 등 조기수급 개선 검토



【 현장 목소리 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(‘22.7월)

- ▶ 부분조기노령연금에 대한 의견 파악결과,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분조기노령연금의 지급비율에 대해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有

- (퇴직연금 활성화)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소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추진 검토
 - * (현재) 12년이후 신설사업장만 퇴직연금 도입의무 → 기존사업장은 퇴직금/연금 선택 가능 (개선) 소사업장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

※ 퇴직연금 제도개선TF 논의(‘24.2~)를 토대로 「**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**」 발표 추진(‘24.上)

4 고정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자산활용도 제고

- (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)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)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 시 세제지원

| 주택다운사이징 세제 |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도입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2억이하 '주택'에 한해 60세이상 1주택자의 주택양도차익 1억원까지 연금계좌 일시납입 허용 * 이자·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(10년 이상)한 부동산(주택·토지·건물 등) 양도차익 연금계좌 납입 허용 * 이자·배당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로 과세 ▶ 연금계좌 납입액(한도 1억원)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 마련 |

- (부동산 유동화) 주택·농지연금 및 부동산 신탁·리츠 활성화, 관련 세제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 추진('24.上)
- (주택연금 활성화)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(주택가격 2→2.5억원)을 확대하고, 일시금 인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우대형 혜택* 강화
 - *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 한도의 45→50%로 상향
- 주택연금 가입 시 부담하는 감정평가비용 면제 대상* 및 자가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실거주 예외사유** 확대('24.5월)
 - * (현재) 주택가격 2억원 미만 1주택자 → (개선) 주택가격 2.5억원 미만 1주택자
 - ** (현재) 요양시설·병원 입원, 부양가족 집에서 동거 → (개선) 노인복지주택 입주 등 추가
- (건강관리 강화) 건강관리 강화 및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수영장,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추진
 - * 현재 ①도서·공연('18.7월), ② 박물관·미술관('19.7월), ③신문('21.1월) ④영화티켓('23.7월) 구매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문화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중

【 주요 사례 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'24.3.5일)

- ▶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·헬스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

- ◇ 중장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및 자산형성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지속

1.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「연금개혁」 추진

① [추진경과] 현재 정부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를 목표로 추진

- 정부와 국회 Two-track으로 연금개혁 방안 논의 진행
 - (정부) 5차 재정계산* 및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5대 분야 15개 과제를 담은 「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」 수립('23.10.27일)
 - *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시 기금고갈 시점 2년('57→'55년) 조기 도래

※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, 수급연령, 기금수익률 등 조합한 모수개혁 시나리오(18개) 제시('23.10.19일)

- (국회) 연금개혁 특위 구성('22.7월~'24.5월 운영), 공론화위* 출범('24.1월) 등 통해 연금제도 개선 방향 논의 중
 - * (국회 연금개혁 주요일정) 의제숙의단(36명)에서 연금개혁 의제 도출 → 시민대표단(500명)에서 의제 논의(~4월) → 여·야간 결론 도출(~5월)

② [향후계획]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

- 시민대표단(500인)이 학습·토론을 통해 모수개혁안 등 방향 도출(4.22) → 추후 연금특위 후속 논의 예정(5월)
 - * 보험료율 13% - 소득 대체율 50% 안이 다수안으로 결정
- 미래 지속가능성 및 소득보장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*
 - *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및 재정추계 실무단 운영('24.1~)

2. 「자본시장 선진화」를 통해 국민·기업이 함께 성장

①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정·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

- (불공정거래 대응 강화)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* 도입, 신고·제보 포상금 확대** 등 사전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

* 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·증언시 제재(형벌·과징금) 감면('24.1월~)

** 건당 포상금 한도 상향(20→30억원), 익명신고 도입 등('24.2월~)

- (유사투자자문업 규율강화) 「진입-영업-퇴출」 쏠단계 걸쳐 규율강화*

* 쌍방향 주식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 포함, 손실보전·이익보장 금지, 직권말소 사유 확대 등

②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

- (투자 유인 제공) 외국인 ID 폐지 등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및 금투세 폐지, 증권거래세 인하, ISA* 등 세제 지원 강화

* (납입한도 상향) 年2천만원→年4천만원 / (비과세한도 상향) 200 → 500만원

- (거래시스템 다양화) 대체거래소 출범('25.上) 및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

③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기업경영 확립

- (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)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등 의무화*, 의무공개매수 제도화, 자사주 및 M&A 제도개선 등

* 내부자의 대규모 거래시 매매계획 사전 공시 등 의무화하고, 위반시 과징금 부과

- (기업 밸류업 자원방안 마련)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* 제공, 코리아 밸류업 지수·ETF 개발, 거래소 중심 상장기업 지원 강화

*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, 주기적 지정감사 면제 우대, 회계·공시 제재감면, 지수편입 우대, IR지원 등 3대부문(세정·회계, 상장·공시, 홍보·투자) 8종 인센티브

◇ 既시행 과제*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·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

*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, 외국인 ID 폐지, 배당절차 개선 등

◇ 금년 중 후속 제도개선 방안 마련·확정 및 법개정 등 후속 절차 차질없이 이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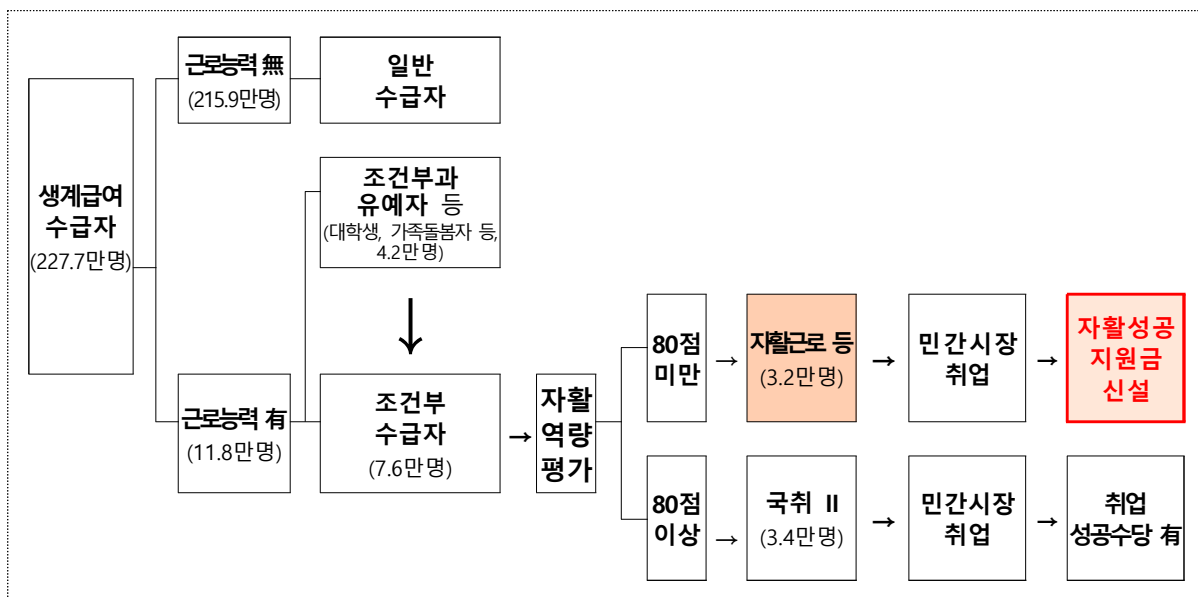
4.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

- ◇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자립지원 및 계층이동 촉진을 위해 **취업·자산형성** 지원강화
 - 자활참여를 통해 민간취업시 **자활성공지원금** 신설, **자산형성** 지원확대 등 근로소득을 통한 자립 촉진
 - 역량별 맞춤 지원을 위한 통합정보전산망 구축, 역량평가 개편, 1:1 맞춤형 **사례관리 강화** 등 자활사업 인프라 개선
- ◇ **근로장려금(EITC)**,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제도를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지원
- ◇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**생계급여 선정기준** 상향, **재산기준·부양의무자** 기준 완화

1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

- ① (**자활성공지원금**) 자활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취업하는 등 자립한 경우 **자활성공지원금*** 신설 지급

* (예)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(생계·의료급여 탈수급) 후 6개월 지속시 50만원,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원 지급(1년간 최대 150만원 지급)



② (자산형성) 자산형성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형성제도의 정부지원 강화 및 소득·재산 기준 등 가입요건 완화

- 생계·의료급여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정부지원금 인상(가입연차별 차등적용)

* (현재) 가입연차 상관없이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칭 지원
(개선) 예시 1년차 10만원, 2년차 20만원, 3년차 30만원으로 연차별 차등 지원

| 현 행 | 개 선 |
|---|---|
| 대상: 근로활동 중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정부지원금: 본인 저축액 10~50만원에 대해 매월 10만원 매칭 지원 | 대상: 근로활동 중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 정부지원금: 본인 저축액 10~50만원에 대해 매월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가입 연차별로 추가 지원* * (예) 가입연차별 매월 정부지원금(만원): (1년차) 10, (2년차) 20, (3년차) 30 |

-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기준 및 청년가구의 소득·재산 인정 범위 등 가입요건 완화*

* (현재) 근로·사업소득 220만원 이하, 청년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부모 소득·재산 조사
(개선) 근로·사업소득 230만원 이하,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청년의 소득·재산만 조사

【 현장 목소리 】 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('24.4월)

▶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참여자 A씨

- "취업 이후 3개월간의 소득을 인정받아 내일키움통장(현재 희망저축계좌Ⅰ)을 지급해 주었습니다. 통장에 돈이 모이니깐 일할 맛이 나요. 앞으로 적금통장도 개설하고 자산형성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."

②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 제고

- (소득보장) 재정·세제 등 소득지원, 고용·복지 연계 등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관련 연구용역 추진('24.上)
- (EITC)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금(EITC) 개선 추진
- 저소득 맞벌이가구의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소득요건 상향(3,800→4,400만원)을 '24년 세제개편안에 반영 추진('24.下)

【 주요 사례 】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('24.4.4일)

- ▶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단독가구의 소득기준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

- **(실업급여)**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, 실업급여 제도는 '노동시장 참여 촉진형'으로 개선
- 사각지대 해소,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및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

③ 저소득층의 자립역량 강화 및 자립여건 조성

- 수급자 역량별 자립목표*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통합정보 전산망 구축, 역량평가 개편, 사례관리 강화 등 인프라 개선

* (현재) 탈빈곤 단일 목표 → (개선) [저역량] 사회통합·역량강화 / [고역량] 탈빈곤

① **(정보연계)** 사회보장정보시스템^{복지부}, 고용보험 DB^{고용부} 등을 연계한 통합정보전산망을 구축(ISMP 수립 완료)하여 맞춤형 자립 지원

- 참여자들의 수급·근로활동·교육·취업 이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참여자 특성별 최적의 탈수급·역량강화 경로 분석 및 적용

② **(역량평가·교육)** 참여자의 실질적인 근로 역량이 반영되도록 자활 역량평가를 개편*(24.下)하고,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실시

* (현재) 신체적 능력 위주 → (개선) 정성 평가(근로의욕 등) 비중 ↑
 ↳ 고역량으로 평가되어 국채로 연계된 후, 역량, 의지부족으로 중도포기 사례 다수

③ **(사례관리)** 세심한 맞춤형 관리를 위해 자활사례관리사*를 확충하고, 복지·금융·의료 통합지원으로 자립 장애요인 제거

* (현재) 지역자활센터 250개 중 125개소에 1명씩 배치
 (개선) 청년·중장년 자활 참여자 비율이 높은 지역자활센터에 중점 배치

【 현장 목소리 】 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('24.4월)

- ▶ "현장에서 건강·중독·부채 문제 등으로 사실상 근로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런 분들이 정부·민간에서 제공하는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근로활동에 실제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저희(자활사례관리사) 역할이죠."

4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성 강화

- 두터운 약자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개선하고, 수급자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

① (선정기준 상향)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

* (현재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인 경우 차액을 지원
(개선) 기준 중위소득 최대 35%까지 지원대상 확대

* 생계급여 예산(조원) : ('21) 4.6 → ('22) 5.2 → **('23) 6.0 → ('24) 7.5**

| 논의 경과 및 계획 | 주요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중앙생활보장위원회(제70차) 의결('23.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준중위소득 +6.09% 증가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(기준중위소득 30→32%) ■ 기초생보 생계급여액을 13.2% 인상하여, 지난 5년간('18~'22년) 총 인상액(+19.6만원) 보다 큰 +21.3만원 인상(4인 가구 기준) |
|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'24~'26) 수립('23.9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중위소득의 35%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및 다인·다자녀가구,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|
|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('24.7, 잠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및 제도개선 과제 논의 예정 |

② (재산기준 완화)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재산환산율(4.17%)이 적용되는 배기량 및 차량가액 기준 상향

* (현재) 배기량 1,600cc 미만,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한해 일반재산환산율(4.17%) 적용 → 동 기준 초과 시 자동차 소득환산율(100%) 적용

【 주요 사례 】 불합리한 재산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미충족

- ▶ 한부모 A씨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보유한 승용차가 배기량 1,600cc 초과로, 소득환산율 100% 적용되어 월 소득 300만원으로 환산
→ 2인 가구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 117만원 초과로 탈락

③ (부양의무자 기준 완화) 빈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생계급여 예외규정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일반재산 기준 상향

* (현재)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생계급여 수급 제외

◇ 향후 중앙생활보장위('24.7월, 잠정) 통한 **기준중위소득 인상률 논의, 예산편성 과정 등을 거쳐 생계급여 지원 단계적 확대 추진**

V. 향후 추진계획

- ◇ **사회이동성 개선**을 위해 지속적인 **정책적 관심**과 **구조개혁 수반 필요**
- 우선 **금년도 예산편성** 및 **세제개편**부터 사회이동성 개선을 **중요요소**로 고려
 - ⇒ 금년 중 천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**사회이동성 통계 개발**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**동향요인** 등을 **체계적으로 점검**하고 **추가적인 대책 마련**
 - * '24년 하반기 「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 마련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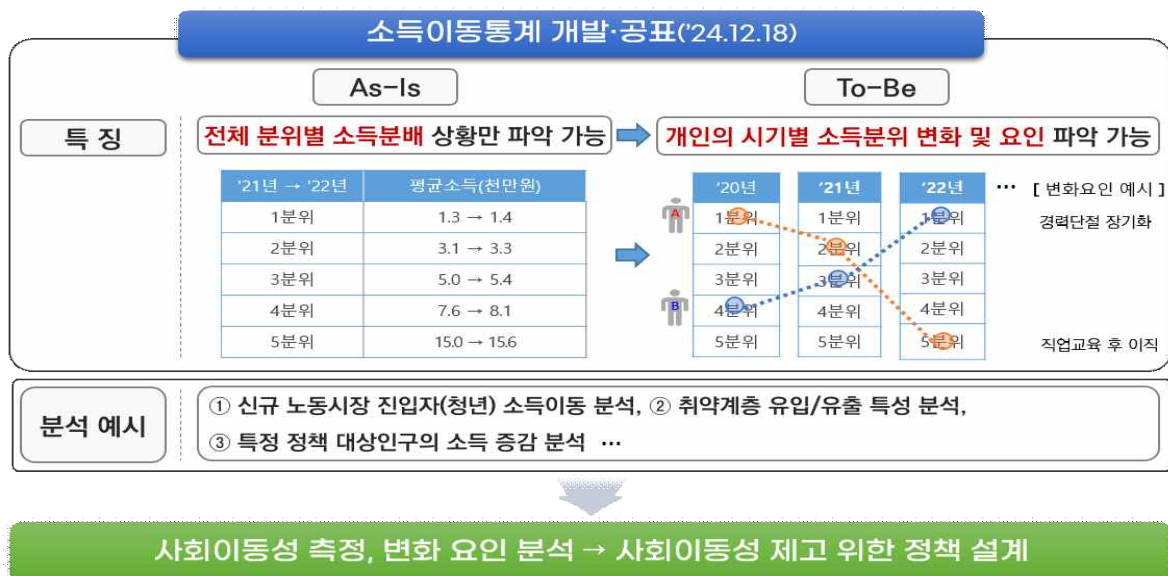
1 사회이동성 통계개발 → 체계적인 분석 및 정책 수립 지원

- 금년 중 통계청에서 국세청 소득자료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천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**사회이동성 측정 통계(소득이동통계*)** 마련
 - * 개인 단위의 인구특성별, 지역별 소득 이동 추이를 제공
- ① 국세청 소득자료 등 **다출처 데이터**를 결합하여, ② **대규모 표본**(전국민의 20%)에 대한 ③ **패널 형태 DB** 구축

소득이동통계 특징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① 다출처 데이터 | · 통계청 등록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 결합 · 향후 행정자료 추가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확장성 및 효율성 증대 |
| ② 대규모 표본 | · 등록센서스 가구 단위 20% 표본*의 가구원 대상 * 2022년 표본 규모 : 496만 가구(1,162만명) |
| ③ 패널 데이터 | · 데이터 총량 변화를 파악하는 횡단면 분석뿐만 아니라 종단면 변화 및 전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 형태 데이터 구축 |

- 통계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**사회 이동성 측정, 변화 요인 분석**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설계에 반영



② 금번 대책 후속조치 이행 및 사회이동성 개선과제 지속 발굴·발표

- 우선, '24년 세법개정안 마련, '25년 예산안 편성 시 사회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 요소로 고려
- 금번 대책에 이어 부문별, 분야별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
→ '24년 하반기 제2차 대책 마련 추진

향후 발표 예정인 주요 정책과제(예)

| 정책과제 | 발표 시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| '24.上 |
| ·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 | '24.下 *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발표 |
| · 계속 고용 로드맵 | '24.下 *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발표 |
| · 자립기반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| '24.下 |
| · 제2차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| '24.下 |

③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등 역동경제 구현방안 추진

-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매년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추진 상황,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대책 마련
- ① 비상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역동경제 틀 내에서 3대 분야* 주요정책 방향 발표
 - * ①혁신생태계 조성, ②공정한 기회보장, ③사회이동성 개선
- ② 혁신생태계 강화, 공정기회보장 방안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「역동경제 로드맵」 마련('24.6월)
 -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지원 합리화, 금융·R&D 지원 강화 등 「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」 마련 추진('24.5월)

| 정책 과제 | 부처·기관 | 시기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. 양질의 일자리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 | | |
| [청년] 고용 인프라 구축 | | |
| · 「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」 구축 | 고용부·교육부· 기재부 | '24.下~ |
| - (1단계)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+센터 중심 실시 | | '24.下 |
| - (2단계) 일반형 대학일자리+센터 및 고용복지+ 센터 도입 확대 | | '25.下 |
| - (3단계) 온라인플랫폼 연계한 온-오프라인·모바일 통합서비스 제공 | | '25.下 |
| · 개방형 기업 트레이닝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심사 기준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기업훈련 프로그램 일반제공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| 기재부 | '25.上 |
| · K-디지털트레이닝을 K-디지털트레이닝+로 확대 개편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-민간고용서비스 기관간 협업 우대 기준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직무능력은행 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단계적 확대 | 고용부 | '24.上 |
| - (1·2단계) 직업훈련·자격·학습이력·경력정보 연계 | | '24.上 |
| - (3단계) 공인 민간자격, 사업주 자격 등 연계 | | '25.下 |
| · 「대중소상생 아카데미」 신설 및 확대 | 고용부 | '24.上 |
| · 중소기업 인재대학 확대 | 중기부 | '24.下 |
| [청년] 전주기 일자리 지원 강화 | | |
| · 직업계고 거점학교 확대 추진 | 교육부 | '25.上 |
| · 직업계고 재학생 취업준비금 지원 추진 | 교육부 | '25.下 |
| · 공공기관 고졸자 신규채용 비중 점진적 확대 | 기재부 | '25.上 |
| ·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공고 개선 | 숏부처 | '24.下 |
| ·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추진 | 교육부 | '25.上 |
| ·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기간 연장 및 올케어플랫폼 연계 | 교육부·고용부 | '24.下 |
| · 대학일자리+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강화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원격강좌·복무경력 학점인정 대학 등 확대 | 국방부 | '24.下 |
| ·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·정부 매칭지원 확대 | 국방부·병무청 | '25.上 |
| ·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 확대 | 병무청 | '24.下 |
| · 센터(제대군인지원센터 등)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전직 지원 서비스 확대 | 보훈부·고용부 등 | '25.上 |
| · 한국형 탈피오토 도입 | 국방부·과기부 | '26.上 |
| ·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공개 촉진 | 고용부 | '24.下 |

| 정책 과제 | 부처·기관 | 시기 |
|--|---------|-------|
| · 우수 중소·중견기업 선정제도 통합 개편 | 고용부·중기부 | '24.下 |
| · 일경험 지원인원 확대 및 일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| 고용부 | '24.上 |
| · 청년 일경험 플랫폼 구축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후속대책 마련 | 고용부·기재부 | '24.下 |
| · 중기사랑카드 신설 방안 마련 | 기재부 등 | '24.下 |
| ·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개편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유희 국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개발 | 기재부 | '25.上 |
| · 디딤돌 대출시 중기 장기재직자 우대 | 국토부 | '25.上 |
| · 중기 재직자 특별공급 물량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의 추진 | 중기부 | '24.下 |
| ·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中소기숙사 공급시 입주자격 재량 부여 | 국토부 | '24.下 |
| [여성]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| | |
| ·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·기간·급여 확대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업주 지원금 재설계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일-생활 균형 경영 우수기업 선정기준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기준 개편 | 기재부 | '24.下 |
| ·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시 ^{가칭} 참여촉진수당 신설 | 여가부 | '25.上 |
| ·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 | 기재부 | '24.下 |
| ·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개편 | 여가부 | '25.上 |
| [중장년·고령층] 주된 일자리 퇴직자·고령층 전직 및 고용유지 지원 | | |
| · 중장년내일센터 등 전직지원 인프라 확충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| 고용부 | '25.上 |
| · 중장기 직업훈련 참여 촉진을 위한 생계비 대부요건 완화 | 고용부 | '24.上 |
| · 「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」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직무·성과 임금체계 전환 범용모델·통합정보시스템 구축, 컨설팅 수행 | 고용부 | '24.下 |
| · 직무·성과 임금체계 전환 평가·인증체계 마련 | 고용부 | '24.下 |
| [노동시장 개혁 및 이중구조 개선] | | |
| · 상생일자리 사업단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강화 | 중기부 | '24.下 |

| 정책 과제 | 부처·기관 | 시기 |
|---|---------|-------|
| 2. 능력·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| | |
| [초·중·고] 저소득층 교육 조기지원 강화 및 교육분야 다양화 | | |
| ·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| 교육부·기재부 | '25.上 |
| · 영재키움프로젝트 초등 3학년 대상 과정 신설 | 교육부 | '25.上 |
| [직업계고] 교육기회 격차해소 및 교육경쟁력 강화 | | |
| ·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 | 교육부 | '25.上 |
| · '24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발표 | 교육부 | '24.下 |
| [대학생]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및 재도전 기회 확대 | | |
| · 취업연계 장학금 저소득층 우선선발 신설 | 교육부 | '25.上 |
| · 4대 요건 중심의 대학 편입제도 개선 | 교육부 | '25.上 |
| 3.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| | |
| · 미래세대 자산형성 지원강화를 위한 ISA 전면 개편 | 기재부·금융위 | '24.下 |
| ·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방안 마련 검토 | 복지부 | '25.上 |
| ·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| 고용부·기재부 | '24.上 |
| ·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| 기재부 | '25.上 |
| ·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| 기재부 | '24.下 |
| ·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혜택 강화 | 금융위 | '24.上 |
| ·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사유 확대 | 금융위 | '24.上 |
| · 수영장, 체력단련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추진 | 기재부 | '24.下 |
| 4. 자립기반 지원 및 약자복지 강화 | | |
| · 자활참여자 중 탈수급한 사람에 대한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| 복지부 | '25.下 |
| · 희망저축계좌Ⅱ 정부지원금 인상 | 복지부 | '25.上 |
| · 저소득층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연구용역 추진 | 기재부 | '24.上 |
| · 맞벌이 가구 대상 근로장려금(EITC) 지급 기준 상향 | 기재부 | '24.下 |
| · 자활역량평가 개편 | 복지부 | '24.下 |
| ·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| 복지부 | '25.上 |
|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 | | |
| · 사회이동성 통계(소득이동통계)개발 | 통계청 | '24.下 |